2024 SPRING

민족화해

VOL 127

| **권두 인터뷰** | 제22대 총선, 민화협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 | **특집** | 북한 통일 노선 전환 배경과 쟁점 | **만나고 싶었습니다** | 황태희 통일부 통일협력국장

ISSN 2288-2782

CONTENTS

2024 Spring No.127

민족화해 민족화해 2024년 봄호(계간, 통권 127호)
등록번호 마포, 마00101
발행일 2024년 5월 31일
발행인 손명원
편집기획위원 김용현 이승현 이예정 임상범 전영선 최지영
발행기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68,
한국YMCA전국연맹빌딩 3층
전화 02-761-1213
홈페이지 www.kcrc.or.kr
디자인 및 제작 (주)지원프린스 (02-2272-5562)

* 본지에 수록된 글들은 민화협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립니다.

COVER STORY

봄이 성큼 찾아왔다. 새해부터 통일과 민족을 거부하겠다는 북한의 소식에 낙담했지만, 그럼에도 다시 통일의 희망을 싹틔우고자 한다. 제22대 국회는 민의를 받들어 한반도 통일과 민족번영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표지사진 김성헌

02 **포토에세이**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 조천현

04 **권두 인터뷰**
제22대 총선, 민화협 출신 당선자를 만나다

10 **통일공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민화협 출신 당선자·민화협 임원단 간담회

12 **특집 – 북한의 통일 노선 전환 배경과 쟁점**
1. 북한의 '2국가론' 이후, 남북관계는? | 안정식
2. 북한의 대남노선 전환,
동북아의 지정학적 맥락과 극복 방안 | 박인휘
3. 북한의 이국가론에 대한 법적 쟁점 | 류지성

24 **이슈 앤 포커스**
민화협의 과거, 현재, 미래 | 이장희

28 **만나고 싶었습니다**
황태희 통일부 통일협력국장

32 **우리의 역사**
독립운동가 김창환(金昌煥) | 박환

34 **민족화해 네트워크**
① 제26차 민화협 정기대의원대회
② 제22대 총선, 주요 정당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 공약 평가 토론회
③ 프랑스협의회 '피난과 전쟁을 말하다' 컨퍼런스
④ 해외협의회: '2024년 민족화합을 위한 사업' 민화협 본부와 협의

42 **회원단체 소식**

44 **문화 모니터**
영화 속 북한 이야기㉛ | 전영선
문학 속 통일미래 ㊷ | 오태호

52 **평화를 만나는 기행 ⑬** | 이영동

56 **민화협 사서함**

5월 24일 오전 5시 양강도 혜산시
혜신동 혜산시장 앞

혜산의 새벽시장

조천현 PD

살림집 굴뚝에서
밥짓는 연기가 피어 오르기 전
새벽시장이 열렸습니다
남새를 파는
아낙들의 소리가 바빠집니다
장을 보고 집으로 가는
사람들의 마음도 바쁩니다

조천현은 조중국경을 다니는 PD로 KBS 일요스페셜 〈현지 르포, 두만강변 사람들〉, SBS 스페셜 〈5년의 기록, 압록강 이천리 사람들〉 등을 연출했다.

“한반도 통일 위한 의정활동 할 것”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됐다. 민화협 임원, 회원단체장, 정책위원 출신 18명이 당선됐다. 민화협은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성국(국민의힘), 이광희(더불어민주당), 김준형(조국혁신당)을 만났다. 정성국 의원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으로서 민화협 13기 상임의장으로, 이광희 의원은 한국청년연합회(KYC) 공동대표로서 민화협 청년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김준형 의원은 제10기 정책위원을 비롯해 통일정책포럼, 간담회 등의 패널로 참여하면서 민화협과 인연을 맺어왔다. 교육, 풀뿌리 민주주의, 외교 등 세 의원이 걸어왔던 길은 다르지만, ‘국민의 평안한 삶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마음만은 같았다. 인터뷰는 5월 9일 국회 근처 카페와 서면으로 진행됐다.

글 김태우 민화협 정책홍보팀 부장 **사진** 김성헌 객원작가

Q.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진구 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정성국 교육전문가로서 깨끗한 정치, 힘 있는 여당의 국민 인재에 대한 바람과 기대가 컸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정치, 바른 정치, 품격 있는 정치를 통해 ‘국민의 마음에 드는 정치’를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국민을 부모님 모시듯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며, 지역경제와 올바른 헌법적 교육가치의 구현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라는 준엄한 명령에 반드시 부응하겠습니다.

Q.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역사상 최초의 평교사 출신 회장으로 교육현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왔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활동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정성국 국민의힘으로부터 교육과 저에 대한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초등교사 출신으로 한국교총 회장, 대통령소속 국가교육위원으로서 책무를 다하던 중에 교육전문가로 국민의힘에 영입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교육 문제의 해결에 저의 교육적 경험과 판단력이 필요하다고 당 관계자들께서 여러 차례 직접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의 최대 민생현안 중 하나인 교육 문제의 해결에 교육전문가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그 부름에 대한 마땅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중 교육개혁이 있는데, 현장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점검·보완하고, 교육현장이 공감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정부와 정치권에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반영하는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교육입법전문가로서 교원, 학부모, 학생 등 모두의 교육미래를 위해 온 힘을 쏟고자 합니다.

Q.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이 무엇입니까?

정성국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우선적으로 집중할 것입니다. 교원지위법 등 ‘교권 5법’의 완수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2023년 교권 보호를 위한 ‘교권 5법’이 통과됐으나, 교육현장에서 오남용되고 있는 ‘아동복지법’상의 포괄적인 ‘정서적 학대 행위’를 구체화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바꿔야 한다는 게 교육 현장의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학교 안전사고 발생시 학생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고 고의 중과실이 아닌 한 교사의 책임을 감면하는 입법도 절실합니다. 또, ‘학교폭력’의 법률상 범위도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것으로 현실화해야 합니다. 이렇듯 교육현장에서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권을 크게 위축시키고,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을 입법으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Q. 통일부와 교육부는 ‘통일교육주간’ 등을 통해 우리 사회 내 통일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젊은 세대일수록 통일에 대한 지지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정성국 통일교육은 남북관계의 긴장 완화라는 목표로 양측이 협력적 교류활동을 지속할 때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권에 따라 협력과 교류 또는 적대와 경계가 달라져 일관성을 갖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훗날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먼저 남북 간 선생님들의 교육문화교류 활동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남북의 교직단체들이 모여 화합, 문화 행사를 가진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교육자들이 중심이 된 교육단체협의체 구성도 고려해봤습니다. 남북 학생들의 공통적인 관심과 민족적 통일성 회복을 위한 공통적인 교육·문화 내용을 중심으로 교류할 수 있는 상시적인 교육단체협의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통일교재도 만들고, 공동의 교사·학생 행사를 정례화하는 방안 등을 민화협과 같이 찾았으면 합니다.

Q. 제22대 국회의원으로서 활동 포부를 소개해 주십시오.

정성국 당이 필요로 하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한민국 교육의 정상화 등 교육 민생을 챙기는 입법에 진력할 생각입니다. 단순히 의원 개인의 입법 차원이 아니라 여당의 현장 교육전문가로서 정부의 교육정책 수립에 중추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당내에서는 어떤 직책보다는 초선의원들의 개혁 의지와 당의 발전을 위한 중지를 모아 전달하는 구심점이 되고자 합니다. 당과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대안을 많이 제시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상식과 원칙의 회복 위해 노력할 것

Q.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소감이 궁금합니다.

이광희 한순간, 한순간이 기적이었습니다. 열세를 딛고 경선에서 이겼으나, 본선에서 초반부터 지지율이 낮았습니다. 그러나 현명하신 서원구 주민들께서는 42년간 지역에서 활동한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기저에는 정권심판과 지역의 일꾼으로 제가 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의 무거움을 안고, 최선을 다하는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Q. 일찍이 청주에 기반을 두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해왔습니다. 청년민주화운동과 '두꺼비살리기 운동'과 같은 환경운동에 앞장섰고, 제9·10대 충북도의회 의원을 역임하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활동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활동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이광희 대학생 시절 민주화운동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자 노력했습니다. 1990년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절차적인 민주주의는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노동, 환경, 인권 등은 선진국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특히 서울 중심의 정치와 문화 환경은 지역과 단절되었습니다. 과대해진 서울에 비해 지방분권을 내세우는 힘은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저는 '풀뿌리 민주주의 시작은 지역에 천착해 지역 문제를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청주 산남동 개발에 맞물려 '두꺼비살리기 운동'이 진행되었습니다. 단순한 환경 보존의 차원을 넘어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자발적 시민의 참여'라는 인식의 변화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인간과 환경, 자연과 생태보존이라는 더 넓은 차원의 싸움을 시작하며, 이후 생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도의원에도 출마했습니다.

Q.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어떠한 입법 발의를 구상하고 있습니까?

이광희 언제부터 우리나라는 상식과 원칙이 아닌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수사 받지 않는 특권, 무고한 국민이 생명을 잃었는데도 공직자 누구도 처벌받거나 책임지지 않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수사 받지 않는 특권, 권력의 힘으로 소수에게만 적용되는 사면 복권의 특권 정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정치의 시작은 제가 가진 특권을 내려놓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 선거 공약 1호인 '국회의원 주민소환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특권 의식은 견고합니다. 그 의식을 깨고 벽을 허무는 역할을 제가 앞장서서 하고 싶습니다.

Q. 현재 남북관계는 대화조차 없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광희 윤석열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는 한마디로 참담합니다. 과거 냉전체제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남북 화해 기조를 무너뜨리고 적대와 불신의 견고한 벽을 더 높이 만들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무조건 반대되는 이념 편향외교가 큰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친북·친중·반미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친일·친미·반중 기조로 한반도의 역학관계를 고려치 않는 '전략적 선명성'이라는 편중된 외교로 국제 고립을 자처하고 남북관계를 경색으로 몰아갔습니다. 민간교류까지 단절된 상황에서 단기간에 남북관계를 개선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 경색된 남북문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남북 민간교류 확대와 평화협정 체제 등 상위 협력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북핵 문제 등 통일에 대한 제반 사안들이 논의의 장에 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Q.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는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부탁합니다.

이광희 국민이 주신 책임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많이 연구하고 배우겠습니다. 통일을 위해 가는 길은 늘 험난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역경 하나하나를 극복해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인민들에게 연설하는 장면까지 만들어 냈던 과거를 기억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궁극적으로 통일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외교의 꽃 '평화' 만들어내는 역할 할 것

Q. 조국혁신당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김준형 국회의원으로 일할 기회를 주신 국민과 당원들께 무한히 감사할 따름입니다. 한편으로 소임을 맡겨주신 이유와 배경을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을 잠시라도 잊을 수 없습니다. 3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의 외교는 국민들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가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를 주도했고 우리 대통령은 세계 주요국 정상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과 2년 만에 국격은 추락하고 '외교참사'라 부르는 실정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를 바로 잡고 대한민국 외교를 다시 정상화시키라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국립외교원 원장, 한동대학교 교수를 역임하며 국제정치학 및 대한민국 외교정책과 관련해 학계에서 오랫동안 활동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김준형 그간 강단과 강연, 각종 미디어를 통해 평화를 지향하는 외교 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간접적이고 장기적으로 조금씩 한국 외교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교가 너무 빨리 퇴보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에는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멀어지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시종일관 굴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는 응급조치가 필요한 지경입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 현안질의로 정부 독주를 견제하며 외교참사를 막겠습니다.

Q.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구상하고 있는 1호 법안은 무엇입니까?

김준형 조국혁신당은 '3특검3국조'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외교참사 국정조사 요구안'을 담당하고 있어 강력하게 추진할 각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대만 유사시 한국군은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 분쟁 지역에 살상무기를 지원하거나 전투병사를 보내지 않도록 하는 법안 등을 준비할 것입니다. 해병대 채상병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빼돌린 사례처럼 정권이 특임공관장 임명권을 남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소위 '런종섭 방지법'도 만들겠습니다.

Q. 우리 정부는 '한·미·일' 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남북문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과 교류를 확대해가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 냉전 구도가 형성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남북관계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김준형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전쟁 불사와 선제공격까지 거론하며 대북 강경노선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남북관계의 악화는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한국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목표는 모든 희생을 불사하는 승리가 아니라, 자제와 타협을 통한 평화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고 강대강 입장으로 2년간 대치해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맹렬히 비판하면서, 이때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멈췄던 것은 애써 모른 체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는 미국과 북한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도 인지해야 합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실패와 이후 남북 신뢰가 깨진 일련의 상황들은 평화프로세스를 가동하던 시기보다 대화 재개를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한반도 리스크는 온전히 우리 국민이 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원해야만 하고, 하다못해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어 예기치 못한 충돌이 일어났을 때 가동될 수 있는 대화채널이 가동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Q. 〈민족화해〉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부탁합니다.

김준형 1970·80년대식 개발과 산업화, 냉전질서에 예속 당하는 외교는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그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정치의 꽃은 복지이고 외교의 꽃은 평화'입니다. 복지와 평화라는 든든한 삶의 기반을 국민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민화협 출신 당선자 간담회

“제22대 국회는 차이를 넘어 하나가 되기 위한 강한 용기와 의지 보여주길”

편집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화협 임원 및 회원단체장 출신 18명이 당선됐다. 이에 민화협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민화협 출신 당선자 및 임원단 간담회’를 5월 9일 오후 12시 여의도에 위치한 중식당 ‘외백’에서 열었다. 정동영, 김주영, 박홍근, 이광희 당선자가 참석한 가운데 손명원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을 비롯한 김민문정(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삼열(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김형진(세종그룹 회장) 상임의장과 의장단, 집행임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손명원 대표상임의장은 당선자들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하며,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민족의 화합을 이루는 데 앞장서 주길” 당부했다. 손 대표상임의장은 2023년 11월 민화협 프랑스협의회가 파리정치대학에서 개최한 ‘시민평화포럼’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전하면서, “세계 속에 자리잡은 민화협 해외협의회의 재외동포들과 젊은 청년들이 현지인을 대상으로 남북의 화해를 넘어 세계 평화의 필요성을 알리는 모습에서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편 가르는 것은 쉽지만 생각의 차이를 넘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강한 용기와 의지가 필요하다”며, 당선자들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남북화해와 민족화합을 위해 힘써주기를 요청했다.

이어 당선자들에게 축하패를 전달하며 당선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박홍근 당선자는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민화협 창립 정신에 따라 시민사회가 통일을 위한 힘을 모아주면 국회 차원에서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당선자는 남북이 만나는 김포 한강하구의 접경지역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손만 뻗으면 닿을 것 같은 한강 너머의 북녘을 자유로이 왕래하지 못하는 현실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제21대 국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 제22대에서는 2018년 남북 민화협 금강산 상봉대회와 같이 민간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희 당선자는 민화협 초기에 한국청년연합(KYC) 공동대표로 방북한 경험을 소개하며, “민화협은 민간차원에서 역동적으로 남북교류에 앞장서 온 역사를 지녔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청주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해오느라 잊고 있었던 통일운동을 국회에서 다시 시작해보겠다”며 민화협과의 협업을 약속했다.

민화협은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통일 위한 제안을 전했다. 주요 골자로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대화 추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와 초당파 협의체 구성 △통일부의 대북 접촉 승인 점검과 특수성을 고려한 민간 통일운동 활성화 지원 예산 확보 등이 있다.

간담회 이후 민화협은 5월 21일 국회를 찾아 민화협 임원출신인 남인순 당선자와 장경태 당선자를 만났다. 남인순 당선자는 2011년 민화협이 북한의 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밀가루를 지원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보수정부 시기에도 인도적 협력과 지원을 위해 민간차원에서 남북교류가 있었는데, 현재는 남북 당국은 물론 민간에서도 일체 대화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를 위해 민화협 등 시민사회와 함께 하겠다고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장경태 당선자는 2018년 11월 남북 민화협 금강산 상봉대회를 비롯한 민화협에서의 경험이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이후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진전되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며,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청년 정치인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에 민화협과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민화협은 창립 정신에 따라 보수, 중도, 진보를 아우르며 각계각층과 한자리에 모여 민족문제와 통일문제를 논의하는 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2

3

1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민화협 출신 당선자 및 임원단 간담회’가 5월 9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렸다.
2 — 민화협은 당선자들에게 한반도 통일을 위한 의정활동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당선 축하패를 전달했다. (왼쪽부터) 김삼열 상임의장, 이광희 당선자, 손명원 대표상임의장, 박홍근 당선자, 김주영 당선자, 김형진 상임의장.
3 — 5월 21일 손명원 대표상임의장(오른쪽)이 국회를 찾아 남인순 당선자(왼쪽)에게 축하패를 전달했다.

NORTHKOREA

북한의 '2국가론' 이후, 남북관계는?

안정식 SBS 북한전문기자

2023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다. 남한이 북한을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해 정권 붕괴와 흡수통일을 노리고 있다며, 남북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정은은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한다며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 겨레 같은 말을 쓰지 말라고 지시했고, 북한 애국가의 가사에서 '삼천리'라는 말을 빼버리기까지 했다. 김일성의 통일업적을 기념하는 '조국통일3대헌장 기념탑'을 철거하는가 하면 남북 간 연결통로인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에 지뢰를 다시 설치하는 등 북한의 남북 분리 움직임은 심상치 않은 수준이다.

북, '진보정권'에 대해서도 실망 표시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2국가론'을 주장한 것 이상으로 주목해볼 부분은 북한이 남한 진보세력에 대해 실망감을 표출했다는 점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남한의 역대 대북정책의 공통점은 '북한 정권 붕괴'와 '흡수통일'이었다면서, "우리(북한)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남한)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고 주장했다. 보수정권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하는 차원을 넘어 남한의 진보정권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실망을 표시한 것이다. 이 부분은 북한이 '2국가론'을 들고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해석해볼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되는 만큼, 이 글 후반부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다.

남북을 교전국 관계로, 북한은 왜?

먼저, 북한이 올해 초 남북을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대남 공세를 폈던 이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북한의 공세 이유를 설명했던 몇 가지 시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 정말 전쟁을 생각할 정도로 무력도발의 위험성이 컸다는 시각이다.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이후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며 "김정은이 전쟁을 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김정은은 지난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일방적으로 전쟁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먼저 전쟁을 도발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김정은은 올해 들어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추진하며 군인들까지 대규모로 투입해 지방 공장 건설에 매진하고 있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월 17일 중요 국방공업기업소의 생산활동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1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연합)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규모로 포탄을 지원하는 북한이 전쟁을 준비 중이라고 보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둘째, 남한의 총선을 겨냥한 공세였다는 시각이다. 남한의 4월 총선을 앞두고 남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대남 공세를 폈다는 주장인데, 선거가 끝난 지금 선거 과정을 돌이켜보면 북한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셋째, 미국을 향한 메시지였다는 시각이다.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미국이 북한에 주목하게 하려 했다는 시각인데, 올해 초 북한의 움직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해석하기도 쉽지 않다.

북한이 남북을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남북 간 연계를 끊어내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하기는 했지만, 올해 초 북한은 워싱턴이 신경을 써야 할 정도의 일을 적극적으로 벌이지는 않았다. 극초음속미사일이나 전략순항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을 하기는 했지만 '정세와 무관하게 진행'됐다며 무기개발 차원의 시험임을 애써 강조했고, 미국을 상대로 한 호전적인 언급도 과도하게 나오지 않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두 개의 전쟁에 몰두하고 있는 미국이 북한에게도 신경을 써야 할 정도로 북한의 행동이 과격했던 것은 아니며, 차기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을 선호할 북한이 굳이 임기말 바이든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대미 메시지를 내야 할 이유도 없었다.

넷째, 대내 단속 차원에서 남북을 분리하려 했다는 시각이다. 북한은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젊은 세대들의 사상 이완을 단속하고 당에 대한 충성심을 고양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사상 무장의 가장 큰 적인 외부문화를 막기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청년교양보장법이라는 이른바 3대 악법 제정을 통해, 특히 '한류'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 남한이 남북관계의
>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 북한이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 비로소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 남북관계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처벌과 단속만으로 문화를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문화는 보이지 않는 곳으로 틈틈이 스며들기 때문이다. 결국 문화가 스며들 수 있는 토대를 허물어버리는게 가장 근본적인 방법인데, 남북을 아예 적대적인 관계로 만듦으로써 남한의 문화가 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차단하려 했다는 것이다. 남한이 전쟁 중에 있는 적대국이 된다면 적대국의 문화를 소비하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대내 체제단속 차원에서 북한이 남북한 분리에 나섰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인다.

북한이 이런 결정까지 가게 된 이유는

이제 북한이 남한의 진보정권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극도의 거부감을 표시해왔지만,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는 보수정권뿐 아니라 진보정권에 대해서도 공개적인 실망감이 표출되었다. 이는 북한 내에서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돼왔으며, 그 결과 남한에서 진보정권이 집권하더라도 북한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

북한은 왜 남한에서 진보정권이 집권하더라도 북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까?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 시기의 경험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재인 정부 시기 3번의 남북정상회담과 2번의 북미정상회담, 1차례의 남·북·미 정상 회동 등 최고위급 수준의 대화가 활발하게 진행됐지만, 경협이나 교류협력 등에서 실질적으로 북한에게 도움이 된 것은 거의 없었다. 단적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도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정상화되지 못했던 것이다.

물론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은 아니다.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무역과 통상으로 먹고사는 우리가 대북제재를 거슬러가며 북한과 사업할 수는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중시하고 누구보다 남북관계에 대한 애정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제사회의 제재시스템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지난 정부 시기의 경험은 남북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던져주는 것일 수 있었다. 남한에 진보정권이 들어서도 대북제재를 넘어 북한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구태여 남북관계를 유지할 실익이 있는가 하는 회의이다. 남북관계는 한류의 북한 유입으로 북한 내부의 체제단속에는 부담을 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남한에서 진보세력이 집권해도 북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북한에게 부담만 주는 관계를 계속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더구나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으니 대북제재에서 벗어날 수 없고 남한 진보정권의 한계 역시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남북관계는?

북한이 이런 검토 하에 남북관계의 차단을 결정했다면, 남한에서 누가 집권하느냐에 관계없이 남북관계의 전망은 어둡다.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는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남북의 인력과 물자가 이동해야 하는 통로인데, 북한이 이 도로들에 지뢰를 깔아 완전 차단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남한 정권의 성격과 관계없이 남북관계에 미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정세는 변하게 마련이고 상황이 바뀌면 북한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남북관계의 손을 내밀지도 모른다. 하지만, 북한의 핵개발과 유엔의 대북제재가 당분간 변하지 않을 상수라고 본다면, 북한이 전술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시도하더라도 그 한계는 명확하다. 우리가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보다 냉정하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남북 경제공동체'와 같은 이상에서 벗어나자. 지금의 남북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손에 잡힐 수 있는 현실이다. 유엔의 대북제재 하에서도 가능한 인도적 지원과 농업·보건·산림 협력, 일부 사회문화교류 등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남북관계의 수준이다.

이러한 협력을 하는데 있어 북한의 호응에 매달릴 필요도 없다. 우리가 북한의 호응에 매달릴수록 북한은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능한 남북협력의 수준을 정하고 북한이 호응하면 응하되 싫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쿨'한 자세가 필요하다.

남한의 정치 세력들이 남북관계의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일관된 입장을 견지할 수 있다면, 그리고 북한이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판단하면, 비로소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남북관계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 이른바 '쿨한 남북관계'이다. 남북관계의 목표치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의 남북관계만 유지되더라도 한반도는 지금보다 훨씬 평화롭고 안정적일 것이다.

안정식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SBS 기자로 입사한 뒤 사회부, 보도제작부, 국제부, 편집부 등을 거쳤다. 2006년부터 정치부에서 통일부를 출입하며 북한 취재를 담당해 왔고 평양과 백두산, 개성과 금강산 지역을 방북 취재했다. 2018년부터 SBS 북한 전문기자로 재직 중이다. 재직 중 학업을 병행해 서울대 정치학과에서 석사,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북한의 대남노선 전환, **동북아의 지정학적 맥락과 극복 방안**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NORTHKOREA

2024년은 한반도 분단 역사에서 새로운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북한이 소위 '두 개 국가론'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면서, 지금까지 유지해 오던 대남 통일전선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남북관계와 대외정책의 설정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북한 주장의 논리적 문제점과 결함은 일단 뒤로 하고, 한반도 문제가 안고 있는 동북아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의미가 워낙 크므로, 동북아 차원에서 북한의 노선 전환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한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할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자.

현재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근 북한이 주장하는 두 개 국가론을 해석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체로 세 가지 차원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한국 정부의 여하한 대북 및 통일 정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배경이다.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새로운 법을 제정하면서까지 한국 문화의 북한 내 확산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해 왔다. 대남 적대 관계를 강화하고 서로 다른 별개 국가 논리를 내세움으로써 한국의 영향력을 새로운 차원에서 봉쇄하고,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어떤 노력도 최초 단계에서부터 무력화하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둘째, 남북한이 여전히 같은 민족이라는 상황보다, 한국이 별도의 적대 국가가 되는 상황에서는 논리적으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의미를 가진다.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실제로 남한을 향해 핵무력을 사용하기보다는, 핵무력 사용 가능성의 논리적 완결성을 더욱 높여 놓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대북한 군사력 우위에 맞서 북한 스스로 안보를 더욱 확실하게 지켜내는 억지력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셋째, 현재의 국제 안보 불안정성을 활용하여 동북아 안보 구조를 악화시킴으로써, 북·중·러 연대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구축하고, 나아가 북한의 독자적인 외교 자율성 확보를 통해 생존 공간을 더욱 넓혀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北, 중·러와의 연대 속 독자적 외교 자율성 확보 의지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북한은 오랜 침묵을 뒤로하고, 지난 2월말 이후 서방 외교관들을 북한으로 초청하는가 하면, 코로나 이후 수년간 폐쇄했던 북한의 해외 주재 외교관을 다시 개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5년간 닫혀있었던 독일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은 최근 공식적으로 업무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유럽 국가들을 시작으로 북한의 외교 무대 복귀는 속속 예고되어 있다. 이런 배경에서 북한 외교관을 다시 대면하게 될 국제사회는 북한이 주장하는 '두 개 국가론'에 대해서 더욱 궁금해할 것이고, 동시에 그만큼 북한의 새로운 대외 노선에 맞서야 하는 우리 정부의 책임과 노력도 더욱 위중해지고 있다.

특히, 당초 올 초 시점의 예상보다는 가능성이 다소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러시아와 중국 정상의 북한 방문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통일 노선 전환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필자는 동북아가 '신냉전'에 돌입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과거 냉전기와 달리 남북한 사이의 국력 격차가 너무도 큰 현실을 고려할 때, '냉전'이라는 의미가 가지는 '경쟁'적 차원의 관계 설정이 이제는 더 이상 남북한 사이에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냉전을 우려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는데, 더구나 러·우 전쟁의 장기화와 중동사태의 불안정성이 국제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상황에서, 북한은 관례대로 국제 안보 불안정성을 자국의 안보 이익 극대화로 연결시키려는 노력에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두 개 국가' 논리가 한반도 수준을 넘어서는 동북아 안보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한일 관계가 안고 있는 여러 장점을 적극 활용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최고 민주주의 국가인 한·미·일 삼국이 전략적 연대를 강화한 '한·미·일 협력'은 분명히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힌 효과를 가져왔다. 무엇보다도 한·미·일 삼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공감대와 대응 방안을 공고하게 구축했고,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전통적 및 비전통적 위협에 맞서 함께 문제

북핵 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앞쪽 가운데)이 지난 1월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

해결 능력을 키워나가기로 합의한 점은 큰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동시에 비록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외교적 고립과 안보 위협에 직면한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과 러시아에 더욱 밀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점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더구나 전쟁의 와중에서 북한의 재래식 무기에 대한 러시아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고, 특히 중국의 경우 소위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간 연대가 강화되는 국제질서에서 더 큰 리더십을 행사하기 위한 북한의 존재 가치를 매력적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남북한 사이의 적대 관계 강화 논리는, 속단키는 이르지만, 북한의 외교 자율성 증대를 위한 새로운 목표 설정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물론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북·중·러 연대가 과거 냉전기 김일성 시기에 북한이 중국과 소련을 상대로 즐겼던 구체적인 외교적 이익에 버금가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지금의 북·중·러 연대는 과거와 비교하여 냉전 대결이라는 일종의 보호막 아래에서 전개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북러 연대가 가지는 상황적 필요성, 그리고 중국의 대미 관계의 복잡한 현실을 고려할 때, 지속 가능성 또한 장담키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한국의 통일 환경이 더욱 복잡해지고 어려워진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더구나 이번에 열린 거의 5년 만의 한·중·일 정상회담의 성과와는 별도로, 만에 하나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이 현실화 된다면, 중국 지도자들이 남북을 동시에 방문함으로써 중국이 북한의 '두 개 국가' 논리를 국제적으로 승인하는 듯한 모양새가 될 수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상상하기도 싫은 나쁜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의 통일 노선 전환과 두 개 국가 논리가 일본의 대북한 외교 공세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 여러 가지 현실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시다 총리는 자신이 처한 일본 내 리더십 한계 문제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효과 차원에서 북일 외교 개선에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미·일 삼국 협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새로운 주장으로 인해 일본이 북한에 다가갈 논리적 명분이 생긴 모양새이며, 역설적이지만 '두 개 국가' 주장은 남북한을 제외한 동북아 주요 국가들의 입장에서 동북아 지역 안정을 위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이 또한 큰 우려가 아닐 수 없다.

> 민간 차원에서도
>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논리 개발로 인해,
> 정부의 통일 정책에 투입할 수 있는
> 리소스를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특수성, 국제성 고려해 '2국가론' 대응해야

그리고 북한의 통일 노선 전환은 최근 들어 그나마 다소 잠잠해진 일부 한국 국민들의 자체 핵무기 개발 논쟁을 다시금 악화시킬 수 있다. '두 개 국가' 주장을 분석하는 하나의 해석으로 북한의 대남 핵무력 사용 자율성 확보라는 점을 꼽을 수 있는데, 이러한 해석은 또다시 우리 국민들의 안보 불안으로 이어져 대체로 30% 이하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는 자체 핵무력 확보 주장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이러한 논리가 만에 하나 일본과 대만 등지로 확산 된다면, 이 또한 우리의 입장에서 마주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분명해 보인다.

독일은 유럽의 다른 경쟁 국가들보다 근대적 통일이 늦었는데, 1871년 지금의 독일이 태어나게 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독일의 출범 때부터 소위 '대독일주의 vs. 소독일주의' 논쟁을 거치면서, 독일 통일과 유럽 지역 전체의 안정은 깊은 연관성을 맺게 되었다. 우리에게 '독일 문제(German Question)'로 알려진 이 문제는 후일 2차대전 이후 동서독 분단 과정에서, 그리고 1990년 냉전 종식 이후 독일 재통일 과정에서 번번이 수면 위로 부상한 바 있다. 마찬가지 논리에서 '한국 문제(Korea Question)'의 중요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더구나 1990년의 독일 통일과 달리 한반도에서는 근대 통일 국가가 존재했던 경험이 전무(全無)하므로, 어떤 의미에서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 지역 안정성과 맺게 될 연계성은 독일 사례보다 더욱 중요하고 심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와 같은 치열한 미중 경쟁 구도 하에서는 '한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찾기가 더욱 어려운 게 당연해 보인다.

북한 및 통일 문제를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적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왔다. 정확하게는 한국의 외교 안보 지향점을 어떤 지역적 맥락으로 세팅하느냐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 김대중 정부의 '아태평화' 중요성 강조,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균형자론', 이명박 정부의 '신아시아 및 글로벌 코리아',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과 신북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과거의 이런 지역 정책들은 한결같이 우리의 지역적 정체성 차원에서 통일 문제를 고민한 결과물이었던 것이다. 주지하는바, 윤석열 정부는 한국의 지역적 정체성을 미국의 '인태 전략'에 동조화시키려는 경향이 강하다. 2022년 말 우리 정부가 발표한 공식적이고 포괄적인 지역 정책 역시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명명되었는데, 전략적으로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미국, 일본 및 호주 등과는 다른 처지에서 한반도 안보의 특수성이 잘 반영되었는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통일 전선 변화 자체가 감지된 것은 사실 그다지 새로운 일이 아니다. '두 개 국가' 주장 역시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어 온 측면이 있다. 다만, 김정은의 성명을 통한 대대적인 공세로 인해 우리 정부가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또 외교 무대에서 통일 지지 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이 추가된 셈이다. 결과적으로 북한 및 통일 문제에 대한 더욱 커진 고민과 책임감이 고스란히 우리 정부의 어깨 위에 내려앉은 셈이다. 민간 차원에서도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논리 개발로 인해, 정부의 통일 정책에 투입할 수 있는 리소스를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역사적 과업이 복잡하고 험난할수록 통일을 위한 노력은 우리 모두의 몫이 되었기 때문이다.

박인휘는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겸 스크랜튼대학 학장으로 재직 중이다. 현재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으며, 2023년 한국국제정치학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북한의 '2국가론'에 대한 **법적 쟁점**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팀장 · 연구위원

지난 1월 5일, 2023년 12월 개최된 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양시 궐기대회가 진행되었다.(연합)

최근 북한의 대남정책은 2019년 미국과의 소위 '하노이 회담' 노딜 이후 점진적으로 적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다가 2023년 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남북관계는 "더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1991년 체결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설정한 양측의 관계로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합의된 의사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총 4개장 제25개조로 구성되었는데 그 내용으로서 상호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기본적으로 남북 간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점, 상술한 바와 같은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점에 의견이 일치한 것이었다. 이러한 특수관계에 터 잡아 동 합의서 전문에는 상호 불가침과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특수관계에 대한 부정은 이에 터 잡은 불가침, 교류협력이라는 남북 간의 기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나아가 통일에 대한 부정을 말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헌법과 남북기본합의서상 남북관계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변화는 이번이 처음으로 야기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에는 별개국가라는 점을 내세우기보다 통일의 과정에 있는 적대관계 또는 교류협력을 지향하는 관계를 반복하면서 자기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상대방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통일의 당위성은 주장되었다. 그러나 이번에 북한에서 제기된 교전국 관계로의 설정 또는 별개국가로서의 관계 정립은 과거에 별로 논의된 바 없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대비가 필요하다.

이 문제를 법적으로 다룸에 있어 우선 우리 헌법상 통일 관련 조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 헌법은 제3조 소위 영토조항을 통해 북한지역이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점을 1948년 제헌헌법 이래 유지하고 있다. 남북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문제는 헌법 제3조의 틀을 넘어설 수 없었다. 다만 1987년 현행 헌법개정에서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조항"이 도입된 이래 이를 통해 제3조를 다소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북한에 대한 우리의 헌법적 의사가 외국으로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즉 별개국가로서의 취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 간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와 협력 등의 노력을 할 수 있음과 그러한 정책적 노력에 있어서 취할 수 있는 헌법적 틀을 제공한 것이었다. 즉, 북한에 대한 개별 국가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었다. 이는 남북관계에 대한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한결같은 태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우리는 북한의 법적 지위를 외국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즉, 북한이 주장하는 교전국 관계 내지 적대적 국가관계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분단국가로서의 특수성, 남북관계

필자는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 또는 일국가 내의 관계 등과 같이 단편적으로 표하는 것보다는 분단국가(devided country)로서 정의한다. 분단국가란 본래 상대방을 부정하고 자신만의 정통성을 주장한다. 따라서 분단국가는 상호 관계나 교류, 경계, 국제사회에서의 입장 등에 대하여 많은 모순점과 풀리지 않는 실타래와 같은 애매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법의 형식논리에만 치우치면 어떠한 유효한 협상도 하기 어렵다. 남북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형식 논리로 풀리지 않는 다양한 문제 역시 분단국가이기에 당연히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내 정치에서는 상호 정치적 이념과 이해관계에 따라 아전인수식의 해석이 반복되고 정권이 교체되면 이전 정권의 합의나 정책은 부정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우리의 대북정책에는 인내와 지속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었고 남북 간에는 신뢰보다는 불신과 약속의 공백이 상존했다. 이점이 통일을 달성한 동서독과 남북한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 북한의 두 국가론에 대한 득과 실을
> 평화통일을 위한
> 우리 헌법제정 권력의 결단에 비추어
> 구체적으로 따져볼 혜안이
> 필요한 시점이다.

만약 남북한이 별개의 국가라고 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부수적인 문제점 가운데 한가지로서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를 꼽을 수 있겠다. 즉, 북한이 외국으로 간주된다면 북한에 거주하는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는 외국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헌법상 북한은 우리 영토이므로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탈북한 이후 우리의 외교적 보호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며 국내 입국 후에는 별도의 국적취득이나 회복의 절차 없이 주민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법절차에 중대한 변화가 수반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남북한은 6·25전쟁 이후 체결한 휴전협정(Korean Armistice Agreement)이 유효한 상태인데 교전국 관계로의 회귀는 휴전협정을 더욱 명확화한다는 점에서 상호 간 군사·안보적 측면의 반목이 거듭될 수 있다. 우리의 휴전협정은 1953년 7월 체결 이후 사실상 전쟁이 없는 평화상태로서 70여 년간 지속되어왔고 그렇다고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 체결된 것도 아닌 세계사에서 유례없이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평화상태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볼 때 더욱 교전국 관계로의 회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휴전선은 국경선으로 탈바꿈되게 되어 국경에 관한 국제법적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추후 개성공단과 유사한 경협이 남북 간에 재개되어도 남한지역 또는 북한지역 내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 문제에 있어 별도의 협상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국내법제적 측면에서 잠시 살펴보자면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 등이 기본적인 법률로서 자리하고 있다. 과거 남북 간 대치국면에서는 국가보안법을 남북 간 기본법으로 취급하였다. 그러나 남북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된 90년대 초반에는 남북교류협력법을 기본법으로, 이후 2000년대 중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합의사항의 규범력 확보 등을 위한 남북관계발전법에 기본법적 지위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우리의 개별 법률에서는 북한에 대한 교류와 협력 등에 대한 특칙과 국제사회의 틀 속에서의 공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현행 입법체계이다. 그러나 교전국 관계가 되면 남북관계에 대한 기본법은 국가보안법 체제가 될 확률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예정한 국내 법제의 규정은 상당 부분 변화를 동반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은 애매한 남북 간의 규범적 문제를 치유하고 차라리 북한을 외국으로 취급하여 여타 외국과 같은 관계를 맺는 것이 남북교류협력을 안정화하고 북한이 우려하는 흡수통일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을 들어 북한에 대한 국가성을 인정하자는 주장이 있다. 그간 남북 간의 통일을 위한 노력과 합의는 대체로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따라 규범력이 부인되기도 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재와 대법원은 남북합의서는 영토조항에 따라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 간 체결되는 조약이 아니어서 법적 규범력이 없는 신사협정(Gentleman Agreement)이라고 판단되었다. 그러한 점에서 차라리 명확히 북한에 대하여 외국으로 취급하면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같은 분단국으로서 노정된 애매한 문제가 치유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자칫 남북통일 시 북한에 대한 우리의 관할권 주장에 있어 정당성을 결여할 수 있고, 남북합의의 규범력 확보 문제는 국내에 이행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과 명분이 약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통일전 동독 역시 별개의 국가임을 주장하였으나 서독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결국 통일을 달성하였다. 북한이 처한 현실과 당시 동독과의 유사성 및 비교를 통한 우리의 준비작업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북한의 두 국가론에 대한 득과 실을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헌법제정 권력의 결단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따져볼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류지성은 일본 쓰쿠바대학 법학과 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팀장으로 재직중이다.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북배경주민과의동행 특별위원회 위원, 통일부 통일법제추진위원회 위원, 통일부 자체규제심의회 위원, 통일부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법제처 남북법제연구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창립 과정을 통해 본 민화협 활동방향 제언

26년 민화협의 과거, 현재, 미래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민간 평화통일 운동의 현재

2024년 5월 현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를 포함한 모든 민간 평화통일운동은 매우 침체되어 있다. 특히 현 정부의 이념 편향적인 외교군사정책에서 빚어진 적대적 대북정책 및 한미군사동맹의 강화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로 인해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패권질서가 동북아에서 형성되었다. 미중 패권경쟁 질서 속에서 남북, 한러, 한중의 전통적 신뢰 관계는 무너졌다.

다른 한편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대륙 간 미사일 무기 발사 실험,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급변한 대남 및 통일노선의 변화에 따른 대남민간창구(북측 민족화해협의회 및 6·15공동선언 북측위원회) 완전 폐지, '민족' 개념 삭제 선언 그리고 이에 대한 남측 당국의 북한 인권 실상 폭로도 민간통일운동에 심각한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다.

민화협 결성 이후 본격적인 남남대화 첫 사업은 금강산 가는 뱃길에서 열린 '민화협 금강호 선상토론회'이다. 1999년 2월 20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간 열린 금강산 기행에서 첫날 "민족화해의 방향과 민간통일운동의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필자는 왼쪽에서 네 번째로 보수와 진보 진영인사가 한 자리에 모여 민족문제에 대한 숙의를 했다.

그런데 정부당국이 북한의 군사적 무력 모험 행태 및 인권실상폭로를 포함한 북한 급변 대남정책 제반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당국은 대북문제에 대한 깊은 원인 분석을 도외시한다. 북한의 외부적 행태 중심 및 이념 편향적 시각에서 대처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 때문에 통일부의 대북정책이 균형을 잃고 70년대 냉전적 시각으로 회귀, 힘에 의한 흡수식 북한 제압이라는 강한 비판을 국내외로 받고 있다. 자유의 북진정책, 북한 정권 종말, 김정은 참수전략이라는 대북 혐오적 단어를 정부당국의 장관이 쉽게 사용한다. 그사이 미래 청년세대 중 통일 및 북한 무관심층이 더 급증하고 있다.

한반도의 엄중한 냉전적 외교, 군사상황 속에서 민화협은 정파를 초월해 민간차원에서 남남 대화 및 남북당국 간 대화의 물꼬를 터서 양 당국에 균형 있고 유연성 있는 민족 정책을 이끌어내야 하는 시대적 책임이 있다. 정부도 남북관계 개선 돌파구로서 민화협의 역할을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

정부 당국의 경직된 대북 적대적 정책과 한미합동군사훈련은 6·15공동선언을 포함한 주요 남북정상합의들에 정면 배치된다. 남북관계의 긴장국면마다 민화협은 남남대화, 남북대화에 물꼬를 터는데 기여해 왔다. 현재 민화협은 남남대화, 남북당국 간 대화 촉구에 마중물로서 국내외적으로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민화협 결성의 역사성과 창립 정신을 돌아보고자 본다.

민화협 결성의 역사적 배경

남측 통일운동은 역사적으로 민간은 적극적이고, 정부당국은 언제나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본시 민족 통일이라는 과제는 민관이 협력해야만 가능하다. 이러한 명백한 진실이 상호 불신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민관 대치 긴장 국면을 오래 유지해왔다. 그런데 1992년 2월 남북기본합의서 발효이후 남북 당국 사이에서도 통일여건이 성숙되었다. 다만 통일운동의 대중화, 일상화, 지역화를 목표로 국민 속에 뿌리내리는 통일운동을 추구해왔던 민간통일운동 진영에서는 민관이 협력하는 방식의 새로운 통일운동 방식을 꾸준히 제시해왔다. 이러한 민관 협력 방식의 민간차원의 노력을 1998년 '국민의정부'는 최초로 적극적으로 수용의사를 밝혔다. 그래서 민간이 매년 주최하는 1998년 8·15행사인 '민족의 화해·평화·통일대축전'에 강인덕 통일부장관이 종전의 소극적 태도와는 달리 적극적 지원과 협력의사를 밝혔다. 이에 힘입어 민관 협력 통일운동의 제도화 작업이 가속화되어 마침내 민화협 결성으로 이어졌다.

민화협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남쪽의 제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참가해 정부도 인정하는 통일운동 상설협의체이다. 민화협은 1998년 9월 3일 결성된 후 2024년 9월 창립 26주년을 바라보고 있다. 민화협은 통일의 과정에서 당리당략이나 계층의 이해를 초월해 민족번영을 추구한다. 통일과정에서 남북 정부 당국이 할 일과 남북의 각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남북은 물론이고, 특히 남한 내 각 정당과 제 사회단체 간 남남갈등이 심각해, 남남대화의 제도화가 매우 절실했다. 이 남남대화 제도화를 실천한 것이 1998년 집권한 '국민의정부'이다. 김대중 정부의 집권 초에는 국가보안법 개폐가 일차적 목표였다. 그런데 국보법개폐를 위한 국회 특위가 만들어져 백방으로 시도했지만, 심각한 보혁갈등으로 실패했다. 여기서 김대중 정부는 민족문제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를 우선 제고시키기 위해 남남대화의 제도화라는 우회 정책을 편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정부는 남남대화의 제도화를 위해 두 가지 방안을 폈다. 첫째는 통일교육지원법 제정을 통한 시민평화교육의 제도화이다. 이에 기초해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시민단체협의체인 통일교육협의회가 2001년 창립되었다.

둘째로 정당과 직능,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만든 남남대화의 제도화가 민화협이다. 민화협은 김대중 정부

의 남남대화 제도화와 평화 철학을 실천한 사업이다. 김대중 정부의 적극적 노력으로 보혁 정당과 사회단체 간 간담회를 여러 번 거쳐, 조직을 구체적으로 기획하는 6인 소위가 구성되었다. 이 6인 소위는 10차에 걸쳐 각계가 참가하는 확장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단체 명칭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로 정하고, 민화협의 목적으로 "국민적 합의도출과 민간차원의 남북화해, 평화 실현 및 교류협력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이라고 하였다.

민화협의 정신

민화협 창립 정신의 지향점은 한반도 평화통일 문제에 대한 남남대화의 제도화이다. 우선 남남대화의 제도화를 통한 국민적 합의도출에 기초해 남북사이의 정치적 화해, 평화실현, 교류협력, 나아가 남북사이의 화해를 지향한다. 이 모든 지향점에 대해 남북이 상세하게 합의한 문건이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이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의 7·4공동성명 3대 정신을 기본으로 정치적 화해, 군사적 불가침,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을 명시하고 있다. 그 출발이 남남대화 및 남북 대화이다. 당시 모델로 삼은 것은 같은 분단국인 중국-대만의 양안관계의 반관반민 민간교류형태다. 양안은 1992년 10월부터 바로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와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라는 반관반민 단체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양안교류, 대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두 단체는 중국과 대만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되, 그 표현은 양안 각자의 편의대로 한다"에 합의하였다. 해기회와 해협회는 양안이 정치적으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세우지만, 비정치적, 비군사적 부문 특히 경제교류협력을 활성화되는 데 현재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런데 1945년~1948년 해방공간 3년간에 남한 내부 및 남북 간의 각 정당과 사회단체들 간의 이념적 갈등이 너무 심각하여 결국 남북 통일정부를 만드는 데 실패하였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남한 내 남남갈등의 심각함이 극에 달했다. 민화협은 남북기본합의서 실천을 우선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서 남북기본합의서 국회비준동의를 얻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나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실천을 위한 국회 결의는 1999년 3월 8일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민화협은 남북기본합의서를 알리고 실현하기 위한 많은 사업을 펼쳤다.

2006년 11월 17일 금강산 관광지구 내 외금강호텔에서 민화협 의장단 회의가 열렸다. 금강산 관광 8주년에 맞춰 남북경협 사업을 되돌아보고 1992년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을 북한 당국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민화협의 나아갈 방향

민화협은 남남대화 제도화에 물꼬를 텃고,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서울과 평양에서 민족공동 행사를 여러 번 수행한 성과를 올렸다. 특히 2005년 6·15민족대축전 평양행사는 당시 경색된 남북한 당국관계 대화의 물꼬를 트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어 2005년 8.15 민족대축전 서울 행사에서 민족공동관심사인 독도문제를 포함한 일제식민지침탈공동대응을 위한 최초의 남북공동학술대회 개최 및 남북학술교류본부구성까지 만들어 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화협은 지난 20년 동안 집권 정당의 색깔에 따라 초심을 잃고 냉탕온탕으로 혼란스러웠다. 그래서 민화협의 초심인 정파를 초월한 남남대화와 남북대화가 일관되게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 민화협이 초심을 잃지 않고 향후 나아갈 길을 조심스럽게 몇 가지 제시한다.

첫째, 엄격한 정파적 중립을 지키면서 오로지 제 정당 및 제 사회단체가 남남대화 및 남북 대화 분위기 조성에 매진해야 한다. 보수, 진보 정권의 교체에 따라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정부 당국도 이러한 민화협의 창립정신을 존중해주어야 한다. 정파적 중립을 위해서 민화협 내에 엄격한 준법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

둘째, 민화협의 핵심 사업은 남남대화를 통한 국민적 합의도출에 기초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실현이다. 이를 위해 우선 남북기본합의서를 국회비준동의를 받게 하여, 국내법률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셋째, 민화협의 상근 인건비와 기본 운영 및 시설비는 정부의 예산이 반드시 주어지도록 법제화돼야 한다. 재정이 충분해야 민화협 사업의 핵심인 남남대화 및 남북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남북한 대북 교류협력 사업이 가능하다. 보혁 정당이 함께하는 민화협의 민간차원에서 남남대화 및 남북대화 제도화 사업은 국가적 민족적 사업이기 때문이다.

넷째, 민화협에 '민족화해 아카데미'를 정기적으로 개설하여, 민화협의 핵심사업인 남북기본합의서 실천에 기초한 남남대화를 활성화하고 대중화해야 한다. 수료생을 민화협 아카데미 총동창회로 결성하여, 민화협 조직과 회원 확대에 활용해야한다.

이장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KIEL) 대학 법학박사(국제법)를 받았다. 한국외대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또 민화협 공동의장,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 위원회 위원장 등 시민사회와 연대를 이어왔다. 현재는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을 맡고 있으며,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와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

소통과 통합으로 통일의 여정 함께 해야

2023년 9월 통일부는 조직 개편을 통해 통일협력국을 신설했다. 국내외 통일 유관기관과 협력해 우리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지지 기반을 넓히고 통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함이다. 〈민족화해〉는 황태희 통일협력국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북한의 2국가론 주장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한반도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글 편집부 **사진** 김성헌 객원작가

황태희
통일부 통일협력국장

2024년 1월 임명된 황태희 국장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대 정치학 석사, 미국 로체스터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임명 전까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북한 비핵화, 제재 전문가로 활동했다. 그가 수장을 맡은 통일협력국은 3과 1팀(통일협력기획과, 국제협력과, 참여소통과, 통일인식확산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일협력기획과는 통일공감대 확산과 정부의 통일정책 확산, 민간 통일운동 지원 등의 역할을 맡고 있고, 국제협력과는 국제적 통일환경 조성, 참여소통과는 지역별 통일+센터를 통한 지역사회의 작은 통일부 구현과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한편 통일인식확산팀은 국내외 통일인식 및 북한 이해 제고를 위해 지난해 9월 신설되었다. 황태희 국장은 국내외에 통일 공감대 확산과 북한의 실상을 바로 알리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고 밝혔다.

10년간 축적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1월 취임 이후 '북한 바로 알리기'에 중점을 두고 탈북민과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 '찾아가는 北스토리'를 집중적으로 추진했고, 최근엔 북한 이해와 통일 인식 제고를 위해 신규 유튜브 채널 'K의 공식'을 개설했습니다. 또 정부의 통일준비 노력을 국민과 함께 하고자 6월에는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하반기에는 인천과 춘천에서 통일문화행사 '통하나봄'을 개최해 문화적 접근을 통한 통일공감대 확산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9월 호남권에 이어 올 10월에는 춘천에 강원권 통일+센터를 두 번째 권역센터로 개관하고 이를 계기로 지역 밀착형 통일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밖에도 국제적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통일국제협력대화 개최, 주한공관 및 유엔사·회원국들과의 협력 강화도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통일부는 지난 2월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공개했다. 2010년부터 6천 3백여명의 탈북민을 대상으로 심층조사하여 북한 내부 변화상을 객관적·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노력한 결과이다. 황 국장은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경제난과 식량 위기는 도외시한 채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함에 따라, 민생 고통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의 의하면 북한의 계획경제와 배급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주민들의 식량을 비롯한 주거, 의료, 교육 환경이 낙후되어 있다. 결국 주민들은 시장에 의존하여 의식주와 생계를 스스로 해결하고 있으며 시장화에 따른 계층 분화로 빈부격차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의식 변화도 주목된다. 김정은의 권력 승계와 백두 혈통 세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외부세계에 대한 관심과 개인주의 성향도

1 — 전라남도 호남권 통일+센터는 2월 27일 황태희 통일협력국장을 초청해 '북한 바로 알기 ' 강연을 열었다.(통일부)
2 — 3월 19일 서울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민주주의와 북한의 장마당 세대' 세션 중 세부 프로그램으로 황태희 통일협력국장이 '북한 경제 · 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에 대한 강연을 했다.(통일부)

늘어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북한 정권과 주민 간의 균열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사회에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뇌물의 일상화'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는 다릅니다. 병원 진찰을 사례로 보면 등록, 진찰, 처방 등 모든 단계마다 조금씩이라도 뇌물을 줘야 한다고 합니다. 잘 보여서 이권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배급제, 무상의료 등 총체적인 정부실패와 시스템 붕괴로 의사든 환자든 생존을 위해 뇌물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간단한 해열제를 얻기 위해서 환자들은 약국이 아닌 시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결국 그 모든 고통은 북한 주민들이 받게 되는 것이죠."

핵 개발, 북한을 더욱 고립시킬 것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발사 이후 북한은 스스로 '핵보유국'이라 자처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이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하지만 황 국장은 체제 유지와 권력 보장을 위한 북한 정권의 핵 개발이 결국 스스로를 더욱 고립시키는 결과만을 낳을 것이라 강조했다.

"현재 김정은은 대외적으로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미국과 담판을 통해 체제 보장과 대북제재 해제를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북핵을 용인하게 되면 동북아 핵도미노 현상이 불가피하고 지금까지 유지해온 NPT 체제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보유를 절대 용인할 수 없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지속해나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더 늦기 전에 북한은 핵개발이 한미동맹의 억제·대응능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초래하며, 결국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심화시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긴밀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우방국과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며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나 기술 이전 등을 강력히 규탄하고 저지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말 이른바 '2국가론'을 제시하며 '통일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 1월 15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헌법에 대한민국을 제1 적대국으로 명시해야"한다며,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등 대남기구를 전면 폐지시켰다. 또 '민족', '통일', '화해'를 거부하며 현재까지 관련된 각종 문구, 기념탑 등을 지우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통일이라는 우리 민족의 절대적 과제를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이 통일정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황태희 국장은 이러한 북한의 행보가 극심한 경제난, 외부문화 확산에 대한 우려 등 복합적인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라 해석했다.

"이제 남북 간 국력 차로 인해 더 이상 체제경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북한이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남북 단절을 시도하며 독자적 국가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내부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국론분열을 기도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적대적' 2국가론은 북한 내부적으로 긴장감을 높여 핵무력 증강과 내부통제력 강화를 위한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북한의 통일정책이 변했다기보다는 적대적 대남 의도를 공공연히 표출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북한이 부정한다고 해서 언어와 역사를 공유하는 민족 정체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주장과 관계없이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며, 민족의 일체성·동질성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헌법 제4조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북한이 잘못된 길을 버리고 정상국가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민간통일운동의 열정과 헌신 감사해

북한의 '통일 지우기'에도 불구하고 민간통일운동단체들은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 민간교류의 파트너였던 북한의 대남기구들이 속속 폐지되고 남북 당국 간 대치가 이어지면서 활동의 동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남북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민간통일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황 국장은 소통과 통합의 메커니즘을 강조했다.

"통일협력국 국장으로서 민화협을 비롯한 많은 민간단체들이 민간통일운동 활성화를 위해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을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운동민간단체의 열정과 헌신은 통일의 길을 열어가는 여정에서 귀중한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을 위해서는 진영 논리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통과 통합의 메커니즘이 시민사회에서 활성화될 때 자유민주주의적 통일 담론 확산도 가능하며, 우리 국민들 사이에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민화협이 민간통일운동 단체에서 변함없이 통일을 향한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구심점이 되어주시고,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고 더욱 크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립운동가 김창환(金昌煥, 1872~1937) 선생

대한제국군인 출신의 대표적 무장투쟁론자

글·사진 박환 수원대학교 명예교수

1

김창환은 별명이 석주, 호가 추당으로 서울 청진동 출신이다. 정2품 군인이었던 김계현의 둘째 아들이다. 대한제국의 군인으로 출발해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자 신민회의 해외 독립군 기지 건설을 위해 만주로 망명한 후 끊임없이 항일투쟁을 전개한 대표적인 무장투쟁론자이다. 그는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서 독립군 양성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군정서, 대한통의부, 정의부, 생육사, 한국독립군 등 만주 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신흥무관학교에서 윤기섭 등과 함께 가장 어려운 시절 10년 가까이 신흥무관학교를 유지하며 독립군 양성에 일익을 담당했다. 그 결과 많은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되었을 정도였다. 이점은 이후 김창환이 서로군정서와 대한통의부, 정의부의 총사령관으로서 1920년대 만주 지역 항일무장 투쟁을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지청천과 함께 한국독립군의 부사령관으로서 항일투쟁을 전개하던 그는 더 이상 만주에 머물 수 없게 되자 중국 본토로 이동해 신한독립당, 민족혁명당, 조선혁명당 등에서 항일투쟁을 지속하다 순국하였다.

김창환은 이처럼 무장투쟁의 지도자로 활동하는 한편, 누구보다도 독립운동단체의 통합과 통일에 힘을 기울이고자 하였다. 그의 그러한 노력은 대한통의부와 정의부에서 김창환과 함께 활동한 정이형의 회고록을 통해서도 짐작해 볼 수 있다. 김창환은 남만주 지역에서의 독립운동단체들의 분열상에 실망한 나머지 북만주로 이동하여 생육사, 한국독립당 등에서 그리고 중국 본토로 이동해 조선혁명당 등에서 활동하며 통합운동에 진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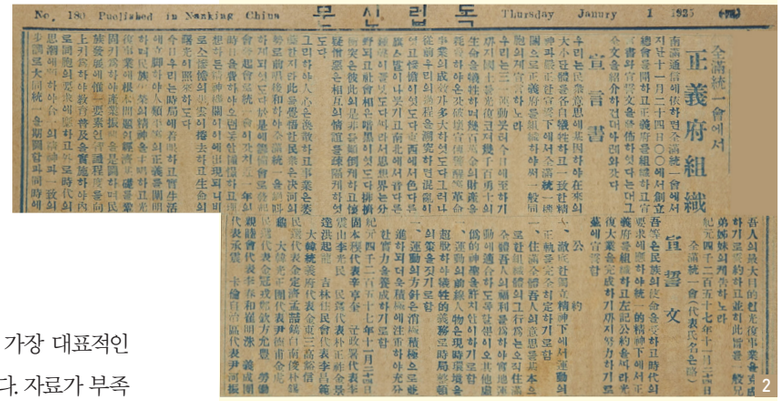
우리가 기억해야 할 잊혀진 독립운동가

김창환은 대한제국 군인으로 출발해 참 군인으로서 만주와 중국 본토에서 책무를 다했으나 1937년 2월 12일 하오 10시 15분 향년 65세로 순국했다. 그가 순국한 후 1935년 11월 중국 항주에서 결성된 민족주의진영의 대표적인 독립운동정당인 한국국민당의 기관지 『한민』12호(1937년 3월 1일자)에서는 그의 죽음을 추도해 「추당 김창환 선생 별세」라는 글을 실었다. 아울러 1937년 4월 30일자 『한민』13호 「조(吊) 추당 일송 두선생」에서도 김창환과 김동삼의 죽음을 추도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 간행된 『신한민보』 1937년 5월 20일자에서도 「고 추당 김창환 선생을」이라는 기사를 통해 애도했다.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잊혀진 인물이었다.

김창환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던 것은 자료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는 한 번도 일제에 체포된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판결문이나 신문조서 등이 남아 있지 않다. 또한 그는 무인 즉 군인이었으므로 글을 별로 남기지 않았다. 더구나 항상 전쟁터인 만주벌판에서 활동했기에 그에 대한 기록은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김창환은 만주지역 무장투쟁사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임을 부인할 수 없다. 자료가 부족하다고 하여 이들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역사에 기록하지 않는다면 이는 또 다른 역사 왜곡을 불러오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김창환 같은 잊혀진 독립운동지도자들이 있었기에 조국의 독립이 가능했다.

1 — 독립운동가 김창환 선생

2 — 정의부 선언서 선서문(독립신문, 1925년 1월 1일자, 180호 4면)



No. 180 Published in Nanking China 독립신문 Thursday January 1 1925

正義府組織 宣言書 宣誓文

2

정의부의 총사령관으로 활동하다

정의부는 1924년 11월 24일 중국 동북지역인 만주의 화디엔시엔(樺甸縣)에서 성립된 남만주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 단체다. 참의부·신민부 등과 함께 3부로 일컬어지며, 1920년대 중후반 만주 지역 독립운동을 주도했다. 중심인물은 김창환을 비롯해 이상룡, 김동삼, 오동진, 이청천, 김창환, 정이형 등이다. 특히 정의부는 입법·사법·행정의 3권분립 체제를 갖춘 준정부적 조직으로서 헌법에 준하는 헌장도 제정해 주목된다. 하얼빈 이남의 40여 개의 현에 거주하는 한인을 기반으로 자치행정을 실시하는 한편 의용군을 편성해 항일무장투쟁도 활발히 전개했다.

김창환은 대한통의부 총사령관에 이어 정의부의 총사령관으로도 활동했다. 그가 지도하는 정의부 소속의 독립군들은 국내로 진입하여 친일파를 처단하는 한편 군자금 모금도 활발히 전개했다. 그 후 1931년 만주사변이 발발하자 김창환은 한국독립군의 부사령관으로도 활약하며 항일무장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참 군인의 표상

김창환은 만주 지역을 대표하는 항일무장독립운동가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사실 김창환은 구한말에는 대한제국의 군인 출신으로서 상동청년회에서 활동했고, 1910년대에는 만주로 망명해 신흥무관학교의 교관으로서 독립군 양성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이다. 김창환은 3·1운동 이후 만주 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단체인 서로군정서, 대한통군부, 대한통의부, 정의부 등에서 무장투쟁의 선봉으로서, 사령관으로서 활동한 인물이다. 그리고 만주사변이 발발한 이후에는 북만주 벌판에서 한국독립군의 부사령관으로서 사령관인 지청천 장군과 함께 반만항일투쟁을 전개한 독립운동가다. 결국 김창환은 대한제국의 군인 출신으로서 만주로 망명해 독립군을 양성하고 항일무장투쟁을 끝까지 전개한 참 군인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박환은 서강대학교에서 사학과(문학박사)를 졸업하고 현재 수원대학교 명예교수와 고려학술문화재단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30여 년간 항일독립운동사, 해외한인사회와 민족운동, 북한사 등을 연구했다. 대표적 저서로 〈만주한인민족운동사연구(1991)〉, 〈시베리아의 항일운동의 대부 최재형(2009)〉, 〈100년을 이어온 역사가의 길(2023)〉 등이 있다.

민화협 제26차 정기대의원회

‘통일과 번영의 한반도’라는 희망 잃지 않는 한 해 만들어 갈 것

글 이으뜸 1020통일공감기자단 **사진** 편집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손명원)가 ‘통일과 번영의 한반도’라는 희망을 갖고 회원단체들과 2024년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한다. 3월 21일 오후 3시 서울여성플라자(대방동) 국제회의장에서 제26차 민화협 정기 대의원회가 열렸다. 이번 대의원회에는 손명원 대표상임의장, 김삼열(독립유공자 유족회 회장) 상임의장을 비롯해 공동의장, 집행임원, 해외협의회를 비롯한 회원단체 등 100여 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했다.

개회식에서 손명원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 “교류와 협력을 골자로 남북 간 새로운 길을 마련”하기를 강조했다. 연초 북한의 대남기구 폐지와 통일노선 전환에 따라 ‘민족’과 ‘통일’을 거부한 것을 두고, “(남북)오천년 역사의 끈은 끊을 수도 없고 끊어지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남북관계가 점점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지만, “통일과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며 “그 역사적 책무의 첫걸음이 바로 즉각적인 대화 재개”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상임의장은 취임 당시 ‘민족화해에서 민족화합으로!’라는 슬로건 속에서 해외동포들과의 연대를 강조해왔다. 그는 민화협이 해외동포들과 협력해 “한반도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북한과 경제협력을 강화한다면 남과 북은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그 과정에서 민화협 회원단체와 해외협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이어 민화협 우수회원 활동가에 대한 통일부 장관 표창 시상식이 있었다. 수상에는 홍주의 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황금주 민화협 정책위원장, 지모또 유끼꼬 세계평화여성연합 전북도 회장, 김갑석 통일민주협의회 공동대표, 류인숙 제천YWCA연합회 사무총장, 정재익 남북문화교류협회 홍보위원장, 전혜지 프랑스협의회 청년위원장, 정구연 민화협 격월간 <민족화해> 편집기획위원(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은희 민화협 정책위원(숭실대학교 베어드교양대학 교수), 김송현·전병화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자단이 받았다.

2부에서는 제26차 정기 대의원회가 진행됐다. 주요 안건으로 △2023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서 승인 △2024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이 통과됐다. 각 안건에 대한 제안은 이재선(천도교청년회 회장) 민화협 청년위원장이 맡았다. 민화협은 올해 주요 활동 방향으로 남북 간 직간접 교류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발맞춰 민간차원에서 남남대화를 통한 통일담론을 쌓고, 중장기적으로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준비”를 삼았다.

특히 국제적인 통일 지지 세력을 확대하는 사업들도 전개하기로 했다. 독일, 프랑스, 중국, 미국 등 10여 개의 민화협 해외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을 알리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질서 정착과 해외교민사회의 통일의지를 모아내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는 제22대 국회가 개원하기에 민간통일운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와 정책 반영에도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회원단체 및 유관기관과 연대하여 남남갈등 해소와 통일준비를 위한 지역·분야·세대를 아우르는 대화의 장도 정례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민화협은 설립 취지에 따라 우리 사회 내 통일담론을 쌓는 과정에서 보수·진보·중도의 각계각층을 아우르면서 회원단체와 연대를 강화하고, 사업 집행에 있어 회계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2

1 — 손명원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이 대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2 — 이재선 청년위원장이 대의원들 앞에서 안건 제안과 설명을 하고 있다.
3 — 민화협 제26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우수회원 활동가에 대한 통일부 장관 표창 시상이 있었다.

1

3

1 — 민화협·북민협·시평포가 함께 4월 3일 "제22대 총선,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 공약 평가 토론회"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2 — 곽수광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
3 — 김삼열 민화협 상임의장
4 — 박창일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제22대 총선,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 공약 평가 토론회

"제22대 국회,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와 초당파 협의체를 구성해야"

글 · 사진 편집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통일·평화운동 및 남북인도적협력 단체가 한자리에 모였다. 민화협은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회장 곽수광, 북민협)와 시민평화포럼(공동대표 박창일, 시평포)과 공동으로 국민합의와 공감이 바탕이 되는 남북관계와 외교정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자 "제22대 총선,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 공약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4월 3일 오후 2시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김삼열 민화협 상임의장, 곽수광 북민협 회장, 박창일 시평포 공동대표를 포함해 주요 정당 정책담당자로 김종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통일전문위원, 김수현 녹색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평화·통일연구위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가 참여했다.

공동주최측은 지난 3월 학계 전문가와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주축이 된 '시민사회 공약평가단(단장 이기범 북민협 부회장)'을 구성했다. 주요 정당들이 발표한 선거공약집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 공약을 바탕으로, △우발충돌방지 및 한반도 위기관리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 △인도·교류협력 및 인권증진 총 4개 주제에 대한 평가와 정책 제안서를 마련했다.

개회식에서 곽수광 북민협 회장은 총선을 앞두고 여러 정당들이 현재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이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갖고 있는지 알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간 적대적 언사와 무력도발로 한반도 주민들은 생명과 안전, 평화로운 일상을 위협받고 있다며, "(남북)극단적 대치 국면이 총선 출마 정당에 득표 유불리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삶으로 우선시 해야한다"고 정당들에게 당부했다.

김삼열 민화협 상임의장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남북갈등, 남남갈등 등 모든 우리 사회 모순이 조국 분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창일 시평포 공동대표는 '평화'를 역설했다. 그는 "무력은 평화를 만들 수 없고 무력은 평화를 지켜줄 수가 없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남북이 다시 화해하고, 평화통일 이룩하며 한민족으로 살아가기 위한 희망의 미래를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주요 정당의 공약 평가에 앞서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여론 지표와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을 살펴보는 발제가 있었다. '무력 충돌·전쟁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2024년 국제관계 전망'을 주제로 김학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가 발표했는데, KBS의 '2023 대북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5.2%가 안보상황이 불안하다고 답변했고, 한국리서치의 '2023 대북인식조사'에 따르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게 개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국내 여론이 남북 긴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2024년 국제사회는 선거로 국내정치적 변화를 예고하

고 있다. 3월 러시아 대선과 중국 양회를 시작으로 4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 9월 일본 총재 선거, 11월 미국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김학재 교수는 민주주의 국가들은 기존 질서 유지를, 권위주의 국가들은 기존 질서 하에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는 보수적 균형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 위기관리와 병행하여 국제관계 변화에 대응하는 "장기적인 동북아 지역차원의 안전보장 방안과 경제 협력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우발충돌방지 및 한반도 위기관리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 △인도·교류협력 및 인권증진 총 4개 주제로 한 주요 정당 공약 평가 발표와 시민사회 제안 발표가 있었다.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부문에서 주요 정당들은 북한 비핵화 답보 상태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비핵화의 단계적 추진이라는 원칙에 공감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제안함으로써 역내 진영의 양극화 추세에 힘을 실었고, 더불어민주당은 "한중, 한러 관계 복원"으로 균형 외교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보이나 동시에 강조한 한미동맹 발전과 어떻게 양립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없었다.

시민사회는 △주변국과의 평화 협력을 위한 균형 외교 촉구와 의원 외교 활성화 △제12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에 대한 엄격한 심사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와 초당파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영아 시평포 활동가는 "제22대 국회가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개선, 주변국과의 협력을 위해 '한반도 평화 협력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이 논의에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초정파 의원 협의체'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발전 방안을 두고 정당들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한 통일논의와 정책추진에 대해 공감하며, 남북 간 또는 국제사회 틀 내에서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해결을 지향하는 공약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협력에 대한 공감대도 있었다. 하지만 세부 정책에 있어서는 빈약하거나 제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시종 민화협 사무처장은 "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조국혁신당의 공약은 남북 직접 대화와 교류를 전제했지만 어떻게 대화의 물꼬를 열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남북 직접 교류 관련 정책이 사실상 전무한 대신 이산·납북자 가족·북한주민 세 주체를 대상으로 한 인권증진에 큰 비중을 뒀다"고 평가했다.

1 — 김종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통일전문위원
2 — 김수현 녹색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평화·통일 연구위원
3 — 김준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자
4 — 공동주최측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 공약평가단을 꾸려 주요 정당의 남북 관계 및 외교정책 공약을 살폈다.

시민사회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미래상에 대한 사회적 대화 확대와 제도화 △남북 인도·교류협력 원칙의 수호와 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접촉 추진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북한인권 증진 유도 등을 제안했다.

이어 주요 정당 정책담당자들과의 토론이 있었다. 김종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통일전문위원은 남북문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의 한계에 주목했다. 남북 당국 간 적대적 인식과 군사적 대치 상황 속에서 국회의 역할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남남갈등 해소와 통일담론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다. 김종수 전문위원은 "힘든 일이겠지만 국회차원에서 통일국민협약 추진위원회 같은 조직을 구성해 사회적 대화를 광범위하게 추진하여, 서로의 차이를 좁히고 실질적인 정책들을 논의하는 구조를 제도화하는데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제약된 환경을 뚫고 나갈 힘을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 모아내겠다는 것이다.

김수현 녹색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평화·통일 연구위원은 집권정당 세력의 반성을 촉구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세 차례 정상회담과 공동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물꼬를 튼 것 같지만, 현재의 남북 경색이 문재인 정권부터 시작됐다는 것이다. 김수현 연구위원은 "북한은 문재인 정부시기였던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핵무력 건설을 강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면서, "화해협력의 대북정책과 군비증강의 국방정책 간 모순이 결국 실패로 귀결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대북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획기적인 정책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자는 안보 포퓰리즘에 빠진 남북 두 정상을 비판했다. 김준형 후보자는 "(남북 정상 모두) 국익과 민족의 염원을 무시한 채 권력만을 유지하려고 한다"며, 과거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오사마 빈라덴이 적대적 공생하듯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본인이 당선이 되면 "한반도 평화군축과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결의안을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조국혁신당이 현 정부의 반평화적이고 냉전적 편향 이념 외교를 막고 적극적으로 평화를 주장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민화협·북민협·시평포는 제22대 국회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낮추고 우리 삶에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을 시민사회와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 토론회 자료집은 민화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민사회 공약평가단

- **단 장** : 이기범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부회장
- **전문가 그룹**
  - **(종 교)** 강주석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총무
  - **(사회문화)**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국제관계)** 김진아 한국외국어대학교 LD학부 교수
  - **(평 화 학)** 김학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 **(남북관계)** 정대진 원주 한라대학교 교수
- **시민사회 그룹**
  - **(북 민 협)** 홍상영 이사·이주성 사무총장
  - **(민 화 협)** 이시종 사무처장·김태우 부장
  - **(시 평 포)** 이태호 운영위원장·이영아 활동가

민화협 프랑스협의회

2024 〈피난과 전쟁을 말하다〉 컨퍼런스 성황리에 마무리

글·사진 이지온 민화협 프랑스협의회 청년위원

민화협 프랑스협의회(회장 전훈, 프랑스협의회)가 현지시각 지난 4월 23일 오후 5시 프랑스 파리의 국립동양언어문화대학(INALCO)에서 <피난과 전쟁을 말하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프랑스협의회 청년위원회와 국립동양언어문화대학(INALCO)의 국제관계학단체 'Promethei(프로메티)'와 공동주최로 2023년 4월에 열렸던 컨퍼런스에 이어 두 번째 협업이다. 'Promethei'는 프랑스 학생들의 국제관계학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INALCO의 여러 학과와 협업하며 국제관계학 관련 잡지 발간, 모의유엔컨퍼런스 등을 주관하며, 국제관계학 학생들의 교류와 친목 도모를 주도하고 있다.

올해는 한반도 근현대사를 통해 그것이 현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탐구하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기획됐다. 컨퍼런스는 이형렬 프랑스협의회 청년위원장의 개회로 시작됐다. 이형렬 청년위원장은 평화와 상호이해를 촉구하며, 이번 컨퍼런스가 한반도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표는 국립동양언어문화대학에서 사회학 및 역사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마리 오세안 라쇼(Marie-Océane Lachaud)가 맡았다. 그는 1876년부터 1953년까지의 조선후기부터 일제강점기 그리고 한국전쟁까지의 한반도 역사를 개괄적으로 소개했다. 이어 일제강점기 프랑스로 망명한 이용제 씨의 아들인 앙투안 리(Antoine Li)가 조선인 망명자를 소재로 발표했다. 그는 프랑스로 망명한 아버지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주한 한국인들이 낯선 국가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의 아픈 역사인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발표도 이어졌다.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 프랑스대대 참전용사 가족을 둔 질손 쟝 프랑수아 펠레티에(Jean-Fran ̧ois Pelletier) 작가가 한국 전쟁 당시 프랑스의 정치·사회환경, 참전용사들의 경험, 그리고 현재 프랑스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들에 대한 인식 등을 다루었다.

청중과의 질의응답도 있었다. 앙투안 리와 쟝 프랑수아 펠레티에는 미처 전하지 못한 그들의 직간접 경험을 공유하면서, 프랑스와 한국 사이에, 더 넓게는 유럽과 한국 사이에 많은 물적, 인적, 문화적 교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약 3시간 가량 프랑스어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에는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있는 현지 학생들뿐만 아니라 6·25 참전용사 가족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는데 대부분 프랑스 현지인들이었다.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프랑스협의회는 한국과 프랑스의 역사적 연관성을 탐구함으로써 두 국가 간 문화와 역사에 대한 학술적 이해를 높혔을뿐만 아니라 현재 남북 분단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관련된 문제를 널리 알릴 수 있었다.

민화협 해외협의회

'2024년 민족화합을 위한 사업' 민화협 본부와 협의

글·사진 편집부

민화협 해외협의회가 2024년 한반도 평화와 민족화합을 위한 활동 의지를 다졌다. 지난 2월 21일 오후 2시 중국지역 협의회 간담회가 민화협 회의실에서 열렸다. 강희방 화남협의회 대표상임의장, 박용규 상해협의회 의장, 하보이 북경협의회 사무국장, 장홍석 전 중국협의회 상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사업 계획과 민화협 본부와의 협업 등을 논의했다. 중국지역 협의회 임원진들은 중국을 둘러싼 국내외적 환경 변화로 교민의 급속한 감소와 동포사회 위축이 장기화 되고 있어 중국 내 민화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다시 열릴 남북교류를 위해 조직정비, 본부와의 정례 회의, 관련 사업검토 등 현재 가능한 부분들 먼저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활동 의지를 다졌다.

민화협 사무처에서도 중국 내 협의회들과의 협업을 약속했다. 위축된 중국지역 협의회들의 조직을 재정비하고 정례적인 온오프라인 회의 등을 통해 서울 본부뿐만 아니라 중국 내 협의회들 간의 네트워크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 중국 내 협의회는 4개로 화남협의회(대표상임의장 강희방), 동북3성협의회(대표상임의장 정종렬), 상해협의회(대표상임의장 강동한), 북경협의회(대표상임의장 최해웅)가 있다.

민화협 프랑스협의회도 서울 본부를 찾았다. 프랑스협의회는 문화·예술·역사 등 인문사회학을 통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2021년 10월에 조직했다. 프랑스협의회 전훈 대표상임의장과 최현주 수석상임의장은 대표적인 재불 예술인으로 겸재정선미술관 개관 15주년 <플렉스 모던 Flex Modern>展 참여 차 한국을 찾았는데, 2024년 활동 논의를 위해 5월 2일 민화협 본부와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손명원 대표상임의장, 김성민 정책위원장도 함께 했다.

전훈 상임의장은 프랑스협의회 청년위원회가 앞장서서 활동 비전을 세우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만들어 내고 있다며, "재불 한인교민, 유학생뿐만 아니라 현지 학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문화와 역사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알리기 위해 올해도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명원 대표상임의장은 2021년에 조직된 프랑스협의회가 짧은 기간에 유의미한 성과들을 만들고 있다며, "2030대 젊은 청년들이 주축으로 참여하는 모습에 항상 감동을 받는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프랑스협의회는 오는 7월에 열리는 제33회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민족화합을 위한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행사와 남과 북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여하는 경기장도 찾아 응원전을 펼칠 예정이다. 전훈 의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면 정파적 입장과 관계 없이 하나로 뭉치는 재불 교민사회와 달리, 우리 고국은 극단의 이념갈등에 놓여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남남갈등을 해소하는데 프랑스협의회도 적극 나설테니 민화협 본부에 많은 도움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프랑스협의회 활동소식은 인스타그램 'kcrc_france'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함께하는 단체들의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소식 1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제23회 유관순상' 시상식 개최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허명)가 제23회 유관순상 시상식을 3월 26일 오후 2시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집에서 개최했다. 충청남도와 공동주최한 유관순상 시상식은 조국 독립에 앞장섰던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시대에 맞게 구현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여성(단체) 및 청소년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 유관순상에는 유연경 사단법인 애국지사 윤희순기념사업회 전 이사장이, 유관순횃불상에는 김경은(돌마고)·김효린(송악고) 학생 등 20명, 특별상에는 유관순 열사 표준영정을 그린 윤여환 충남대학교 명예교수가 받았다. 허명 회장은 시상에 앞서 "유관순 열사의 위대한 정신을 각자 처한 환경에서 훌륭히 실천하고 계시는 수상자 모든 분께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홈페이지: https://www.kncw.or.kr/)

소식 2 한국여성단체연합, 3·8세계여성의날기념 '제39회 한국여성대회' 개최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김민문정·김윤자·양이현경)이 3·8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하여 제39회 한국여성대회를 개최했다. 3월 8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어두울수록 빛나는 연대의 행진'을 슬로건으로 2천여 명의 여성·시민들이 참여했다. 2023년 한 해 우리 사회 성평등과 여성운동 발전에 공헌한 인물에 대한 '올해의 여성상'과 '성평등 디딤돌' 시상식도 있었다. '올해의 여성운동상'에는 오랫동안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통념에 맞서 장애인 인권 운동의 조직적 변화를 이끈 '고숙희' 인권활동가에게 돌아갔다. 참가자들은 새로 개원하는 22대 국회를 향해 '평등한 시민적 삶',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과 복지제도 개선', '돌봄과 생태사회로의 국가비전 수립' 등을 요청하며, 청계광장–안국동–평화의 소녀상–광화문광장으로 이어지는 행진으로 성평등 사회로의 전진을 다짐했다.

(문의: 한국여성단체연합 02-313-1632)

소식 3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12회 평화학교' 개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이 제주4·3 76주년을 맞이해 4·3의 진실과 평화와 통일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제12회 한국노총 평화학교'를 개최했다.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진행된 이번 평화학교에는 한국노총 산하 회원조합 조합원, 노조 간부 80여 명이 참여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평화·통일 교육, 4·3평화공원(추모식), 알뜨르비행장, 섯알오름 학살터, 송악산 진지동굴 등을 찾아 제주도민의 희생을 위로했다. 이봉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은 "76년 전 만물이 생동하는 4월, 더욱 아름다운 제주 곳곳은 국가 폭력에 의해 섬 전체가 초토화됐다"며 "모진 세월 속에서 역사 진실을 규명하고 화해와 상생으로 나선 제주도민의 희생과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홈페이지: http://inochong.org/)

소식 4 한겨레통일문화재단, '2024 역사와 문화가 있는 평화 기행' 참가자 모집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이사장 문정인)에서 '디아스포라를 넘어 통일의 길로'라는 주제로 중앙아시아 3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평화기행 참가자를 모집한다. 고려인의 강제이주 최초 정착지인 우슈토베, 고려인 신문사인 '고려일보사', 키르기스스탄의 진주 '이식쿨' 호수,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부하라' 등 한민족의 정체성과 평화 통일의 길을 찾는 주요 유적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일정은 8월 6일부터 17일 12일간이며, 참가비 445만 원, 30명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은 중앙아시아 3개국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호주, 아시아 등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9차례에 걸친 평화기행을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인 문의는 비케이투어(02-703-1373)로 연락하면 된다.

(홈페이지: https://koreahana.net/)

6년, 그리고 2024년 예술영화 〈하루낮 하루밤〉

글 전영선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

'6년 만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 아마도 어떤 기록을 먼저 생각할 것이다. 6년이라면 길다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다. 6년 만이었다. 북한에서 새로운 영화가 나온 것이. 모든 영화는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술영화다. 예술영화는 예술성을 지향하는 영화라는 의미는 아니다. 북한에서 예술영화는 우리가 아는 영화, 극장에서 보는 영화다. 북한에서 영화는 기록영화, 아동영화, 과학영화, 예술영화로 분류하는데, 극영화를 예술영화라고 한다.

2016년에 <우리 집 이야기>를 포함하여 세 편의 예술영화가 나왔다. 그리고 한동안 영화에 대한 보도가 없었다. 그러나 6년 뒤인 2022년 4월 10일 조선중앙통신은 "조선4.25예술영화촬영소에서 최근 '공화국영웅'인 전쟁로병 라명희(극중에서는 라명주로 나옴)의 '반당반종파' 투쟁을 그린 새 예술영화 <하루낮 하루밤>을 창작했다"고 보도했다.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들의 음모의 내막을 끝까지 폭로하는 한 평범한 처녀 간호원의 하루낮, 하루 밤 사이의 투쟁이야기를 통하여 영화는 자기 수령을 결사보위하고 자기 제도를 지키는 것이 이 나라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고 마땅한 도리라는 주제 사상을 깊이 있게 해명하고 있다.", "심금을 틀어잡는 역동적인 사건 전개, 예상을 뒤집는 극 구성의 탐구 도입으로 행동의 예술로서의 특성을 살리고 극적 견인력을 비상히 높임으로써 시종 긴장과 격동 속에 빠져들게 하는 영화는 새로운 경지에 올라선 우리 영화예술의 발전상을 실감하게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확인할 수 없었다. 비공개였다. 맛보기로 보여준 티저 영상은 상당히 달라진 영화임을 짐작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2024년 1월 1일과 2일 조선중앙텔레비죤을 통해 방영되었다.

계급 교양을 주제로 한 전형적인 반탐영화

예술영화 <하루낮 하루밤>은 1950년대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다. 김일성 수상 시절이다. 반김일성 세력이 김일성을 제거하려고 시도했던 사건이 배경이다.

영화는 라명주(라명희의 영화 속 이름)가 의사로 근무하는 병원으로 첩보부대원이 찾아오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첩보부에서는 '리상철'이라는 가명으로 암약하던 리태일을 체포했는데, 라명주와 인연이 있었다. 리태일은 '신해방지구'(38도 이남 지역이었다가 휴전 이후 북한 땅이 된 지역을 북한에서 일컫는 말, 주로 황해남도 지역)에 숨어들어서 불순 사상을 유포하고, 종교 침투를 시도하다가 체포되었다. 체포된 리태일은 '라명주를 만나고 싶다'고 하였다. 보안원의 말을 들은 라명주가 리태일의 집에서 있었던 그날을 회상하면서, 과거로 들어간다.

라명주는 어린 나이에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고아였다. 이리저리 문전걸식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에 '독고마리'(열매에 갈고리 모양의 가시와 짧은 털을 가진 국화과 식물로 사람이나 동물에 달라붙는 성질이 있음)라는 별명이 생겼다. 다행히 나라에서 거두어 간호원이 되었는데, 라명주를 불쌍히 여긴 사람의 소개로 리태일의 집에 머물면서, 그를 간호하게 되었다.

리태일의 아버지는 철도경비대 부사령관이었다. 아들 리태일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들을 돌보아줄 간호사 겸 집사를 구하고 있었다. 리태일은 자기를 돌보는 간호사를 세 번이나 갈아치울 만큼 성격이 예민했다. 그런데 두 살 많은 라명주에게는 곁을 주면서 가깝게 지냈다. 하지만 리태일의 엄마는 아들에게 라명주를 잘 감시하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다. 아들을 돌보는 간호사를 '잘 감시하라'고 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수상 제거 작전

리태일의 엄마가 아들에게 라명주를 잘 감시하라고 한 이유는 은밀한 작전 때문이었다. 리태일의 아버지는 '대감'이라 불리는 인물과 함께 '수상 김일성'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다. 리태일의 집은 철도역으로 통하는 외곽에 있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하게 작전을 진행하기에 좋았기에 일부러 이 집을 거처로 정했다.

리태일의 아버지는 김일성 수상 일행이 현지 시찰을 마치고 평양으로 온다는 보고를 받았다. 라명주는 우연히 통화를 엿듣게 되었다. 라명주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그리고 좀 더 확실하게 알아내려고 했다. 마침내 라명주는 지하 창고에서 '내각 수상이 탄 열차를 폭발시키겠다', 이 작전이 실패하면 '제철소에서 용광로를 폭파해서 제거하겠다'는 계획을 알게 되었다.

리태일의 아버지는 김일성을 제거하기 위해 수도공사를 핑계로 철도경비대 병사들을 집으로 불러들였다. 혹시나 모를 의심을 피하고자 철도 근무복으로 입히고, 실제 작업하는 것으로 꾸미면서 철저히 준비했다. 한편 철도경비대에서는 수상이 탄 열차 도착이 예정되어 있는데, 경비 인원이 줄어든 것을 알았다. 그리고 경비대원들이 경비대 부사령관 리태일의 집에 하수도 공사로 나갔다는 것을 알고는 부하를 시켜 확인하게 했다. 라

명주는 철도경비대에서 사람이 온 것을 보고는 사건 내막을 편지에 적어, 경비대 사람 윗주머니에 넣었다. 그런데, 편지를 확인한 경비대 사람은 '간부 동지를 모해하는 편지가 전달되었다'면서 리태일의 아버지에게 주었다. 이 광경을 본 요리사가 보안대 부원을 살해하고는 음주로 위장했다. 리태일의 아버지는 라명주가 편지를 썼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녀를 지하에 가두었다. 그리고 수상을 제거하는 '오늘 밤만 살려두'기로 했다.

김일성 수상을 제거하려던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했다. 그러나 수상이 탄 열차가 도착하기 전에 화차에서 시한폭탄이 발견되면서 실패했다. 철도국장은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내각에서 편성한 열차 시간을 전면 재조정하고, 철도에 대한 감시와 호위도 강화했다. 그리고 리태일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하게 되었다. 감시의 눈길이 생기면서, 수상 제거 세력은 한 자리에 모이기가 어려워졌다.

살인 누명을 쓴 라명주

수상 제거를 총괄 지휘하는 '대감'은 리태일의 아버지에게 자연스럽게 모일 구실이 필요하다면서, 은밀하게 상가(喪家)를 만들라고 했다. 상가를 만들려면 누군가는 죽어야 했다. 고민하고 있을 때, 리태일의 할머니 한옥자가 나섰다. '자기를 이용하라'고 했다. 리태일의 아버지는 독약이 든 주사기를 라명주에게 주면서, 수면제가 들었으니, 푹 주무시도록 주사를 놓으라고 했다. 라명주가 주사를 놓자 한옥자는 그대로 죽었다. 놀란 라명주에게 리태일의 아버지는 '너다 죽였다'면서, 라명주에게 살인 누명을 씌우겠다고 겁박했다.

한옥자의 사망이 알려지고, 문상객들이 찾아왔다. '대감'을 비롯한 수상 제거 세력도 조문을 핑계로 찾아왔다. 일행은 지하실 작은 방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모의했다. 대감은 수상이 제철소를 방문했을 때, 용광로를 폭파시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그리고 만일 그 계획이 실패하면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을 제거하고,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새로 구성할 내각 구성원까지 구체적으로 작성한 계획서를 보여주었다.

탈출 기회를 엿보던 라명주는 다시 잡혀 지하실에 갇히게 되었는데, 지하실의 작은 쥐구멍으로 이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수상 제거 계획을 엿듣게 되었다. 음모를 알게 된 라명주는 우여곡절 끝에 지하통로를 통해 가까스로 외부로 탈출했다. 라명주는 철도성 지휘부 간호원 라명주의 이름으로 김일성 수상 앞으로 자신이 들었던 제거 계획을 적은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다. 그리고 체신소에 긴급통화를 요청했다. 통화를 시도하려는 순간에 통화가 끊어지고 전기도 나갔다. 통화를 연결해 주었던 체신소 직원도 싸늘하게 죽어 있었다.

놀라는 라명주 앞에 죽은 한옥자(리태일의 할머니)가 나타났다. 리태일의 아버지가 준 독극물은 가짜였던 것이었다. 한옥자가 라명주를 위협해 죽이려는 순간 보안원들이 체신소에 도착했다. 라명주가 신청한 긴급통화가 끊어진 것을 보고 긴급 출동한 것이었다. 라명주는 위기를 모면했다.

라명주의 제보로 리태일의 아버지를 비롯한 일당의 음모가 밝혀졌다. 리태일의 아버지와 엄마는 탈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총격전 끝에 사망했다. 그러나 리태일은 보안원을 죽이고 탈출해 신분을 숨기고 살았다. 병약하고 무기력하게 보였던 것도 남의 눈을 속이려는 행동이었다. 탈출한 리태일은 몰래 숨어서 사람들에게 허무주의 사상과 종교를 퍼뜨리다가 잡혔던 것이었다.

"계급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계급 교양의 본보기

최종 재판을 앞두고 리태일은 라명주와의 만남을 요청했다. 병원에서 수술을 마친 라명주는 법정 증인을 자처하고 나섰다. 라명주는 50년 전을 회상하면서, 마지막 진술을 했다.

"50년 동안 강산이 다섯 번은 바뀌었으나 계급의 본성은 바뀌지 않았다.", "목숨이 오가던 그 하루낮 하루밤에 난 값 비싼 대가를 얻었소. 난 살고 싶었오. 살고 싶어서 지키는 길을 택했소. 공화국이 아니면 난 그냥 독고마리 인생이고, 죽은 목숨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소. 기억나오. 공화국이 나에겐 아버지이고, 어머니라고 했던 말.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내 운명을 맡기고 싶은 그 품은 변함이 없고. 또 그 품을 반역하는 놈들에게 추호의 감형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 라명주가 반생을 살면서 얻은 교훈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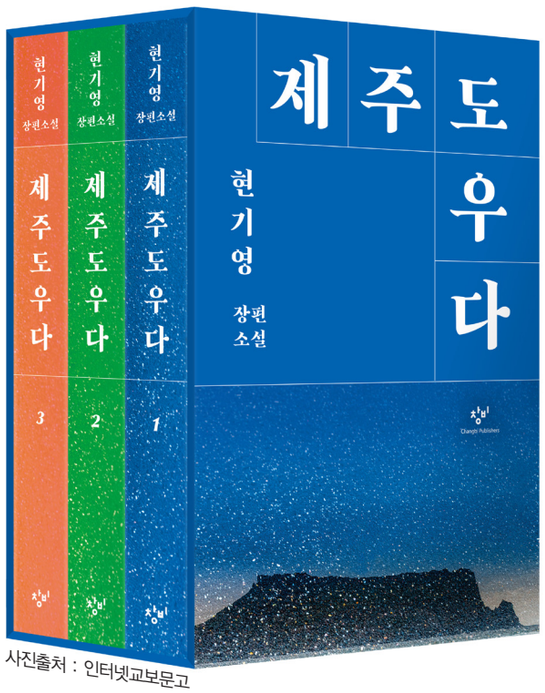
라명주의 회상을 끝으로 영화는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 라명주 역을 맡았던 배우 김류경이 영화 주인공인 라명희의 집을 찾아갔다. 가족들이 라명희가 받은 공화국영웅증을 보여주었다. 배우들은 라명희가 김정은을 만날 때 입었던 군복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군복을 입은 라명희가 "우리 제도를 지키고 우리 수령님을 목숨바쳐 지키는 거야 응당한 도리이고 의미가 아니겠나."고 말하면서 영화는 끝난다.

전영선은 한양대학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통일준비위원회 전문위원, 제27대 북한연구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북한 사회문화 및 문화예술에 대한 다수의 저서를 펴낸 북한문화예술 전문가이다.

‘남의 국민’과 ‘북의 인민’이 아닌 제주도민으로서의 비극적 정체성 탐색

현기영의 『제주도우다』(2023)론

글 오태호 경희대학교 교수 · 문학평론가



사진출처 : 인터넷교보문고

1. 역사적 진실의 다큐멘터리화

‘1948년 제주 4·3 사건’의 여진은 2024년에도 현재진행형이다. 제주 곳곳에 그리고 한반도 남단에 사건의 여파가 새긴 깊은 상처들이 아직도 다양한 형태로 웅크리고 있고, 온전히 치유되어야 하는 비극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거나 폄훼하려는 극우주의자들이 세상을 활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엄혹한 시기에 ‘제주의 작가’ 현기영은 장편소설 『제주도우다』(2023)를 3권의 장편으로 엮어낸다. 속 표지에는 “어떠한 비극,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인생은 아름답고,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라는 저자의 친필 문구가 인쇄되어 있다. ‘그 어떠한 비극적 절망’의 현실 세계에서도 아름다운 인생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것은 절망적 비극을 뼛속 깊이 체감한 사람만이 던질 수 있는 가슴 절절한 전언에 해당한다.

『제주도우다』는 30대 초반의 부부가 오래전 비극의 당사자들이 제주의 참사를 ‘그 사건’이라는 표현으로 ‘가까스로 겨우’ 호명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 사건의 진실을 담아내고자 시도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의 화자인 32세 임창근은 같은 대학 미술과 동기생이자 제주가 고향인 31세 아내 안영미와 함께 영미의 할아버지인 ‘안창세’의 증언을 중심으로 ‘그 사건’을 형상화하고자 한다. 두 사람은 3년 동안 사건 자료와 증언집들을 찾아 읽고 토론하며 사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증언자들이 하나같이 정신적으로 “그 사건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과 “이것저것 눈치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떠듬”거리며, “너무도 조심스러운 증언들”로 진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따라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바로 “공포 속에 가라앉은 이야기를 건져올리는 것”이라고 판단하게 된다.

2. ‘살아서 죽은 생존자’의 증언

1) ‘헛것’에 대한 공포와 ‘이미 죽은 사람’으로서의 삶

영미의 할아버지인 창세는 가족의 비참한 죽음에 대한 기억과 자신이 당한 모진 고문의 후유증을 평생 앓고 있다. 평생 그 사건에 영혼이 붙들린 채 남몰래 ‘그 사건’과 혈투를 벌여왔으며, 그 기억을 억눌러 묻어버리거나 잊어버리기 위해 무진 애를 썼지만, “그 사건의 기억은 노인에게 불가항력의 절대적 존재”였고 “그 사건에 대해 발설한다는 것은 반세기 넘도록 무서운 정치적 금기”였기에 할아버지는 닫힌 입을 좀처럼 열려고 하지 않는다.

중학생 때부터 시인이나 소설가가 되고 싶었던 노인은 “그 무서운 사건이 내 꿈을 완전히 박살 내버린 거”라면서, “그 사건 후로는 모든 게 헛것으로 보여 무얼 쓸 수가 없었”고, “모든 것이 헛것이고 그 사건만이 진실”이지만, “무서워서” 그걸 글로 쓸 수 없었다고 고백한다. 70여 년이 지난 지금 노인은 그 사태 때 자신이 “이미 죽은 사람”이라며 ‘허깨비’라는 말을 반복한다. 노인은 ‘육신은 살아 있지만, 영혼은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 말하면서, “소리 없는 눈물, 애간장이 다 녹은 눈물, 바위가 흘리는 것처럼 고통도 슬픔도 보여주지 않는 눈물”을 흘리면서 거의 열흘 동안 이야기를 쏟아낸다.

2) 1947년 3·1절 기념 집회 발포 사건과 서청의 잔혹한 폭력

작품은 옛날 옛적에 장차 조천포라고 불리게 될 갯마을 새콧알에 살던 안씨 선주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지만, 해방 전후를 거쳐 미군정이 실시된 이래로 1947년 미국 양과자가 “조선을 좀먹는 미제 침략자들의 독약”이라면서, 2월 10일 읍내에서 미군정에 대한 최초의 집단 항의로 양과자 반대 시위가 일어난 이야기가 비극의 핵심적 맹아로 다루어진다. 특히 기관총을 설치한 미군 지프차가 시위대를 향해 공포를 쏘면서, 해방의 감격과 미래에 대한 꿈이 참혹하게 짓밟힌다. 시위대를 향해 일제사격의 총성이 울린 뒤 4명이 즉사하고 중상자도 여러 명 발생하지만, 미군정은 발포 명령자 처벌 문제에 대한 언급은커녕 사과 발언도 하지 않는다.

3월 10일 좌파와 우파를 망라한 전도적인 민관 총파업이 열리지만, 미군정의 조선인 1인자 경무부장 조병옥이 정당방위였다며 적반하장격으로 나온다. 조병옥의 진두지휘 아래 총파업을 진압하려는 대검거 선풍이 휘몰아치고 파업에 적극 가담한 공무원들은 파면된다. 산발적인 시위와 삐라 투쟁이 계속되면서, 경찰은 노골적으로 총칼을 들이대

며 강한 물리력을 행사하고, 도민에 대한 탄압과 겁박이 극심해지자 민간의 증오심은 더욱 커진다. 북조선에서 내려온 '백두산 호랑이'를 자처하며, '평균 나이 22세, 거의가 25세 이하'인 어린 청년들로 구성된 8백 명 정도의 서북청년단(서청)은 "역적의 남로당을 까부수자! 역적의 민애청을 때려 부수자!"라고 외치며 폭력을 자행한다. 남로당이 불법화되자 서청의 민중 탄압은 더욱 포악해지고 구타와 고문이 일상화된다. 대다수가 월남민 교회 출신 기독교인인 서청은 자신들이 '하느님의 충복'이라면서, 빨갱이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느님의 뜻'임을 강조한다.

> 검붉은 저녁 햇살에
> 꽃잎 시들었어도
> 살 흐르는 세월에
> 그 향기 더욱 진하리
>
> 아.. 아-
> 아.. 아- 아-
> 아- 반역의 세월이여
> 아- 통곡의 세월이여
> 아- 잠들지 않는 남도
> 한라산이여

3) 1948년 무자년의 집단 학살

1948년 무자년에 남로당과 민전이 2월 7일을 기해 전국적 총파업을 일으키고, 이후 경찰의 수배를 받아 산으로 도피한 청년들이 전투적 입산자가 된다. 4월 3일에는 봉화가 오르며 입산 청년들이 봉기를 주도하여, '12개 경찰지서, 경찰 후원회 간부, 대청 간부들의 집'을 공격한 이후 '민간인 8명, 경찰 4명, 산군 2명 등의 사망자'가 발생한다. 국방경비대 11연대가 강경 무력 진압 명령을 받자 연대장은 "제주도 폭동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30만 명이 희생되더라도 무방하다. 제주 백성 아니라도 나라가 선다."라고 취임사에서 말한다. 조병옥은 서청 5백 명을 증파하면서 "건국에 저해가 된다면 비행기로 휘발유를 뿌려 온 섬을 불태워버릴 수도 있다."고 공언한다.

8월 15일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된 뒤, 산부대가 점점 과격해져서 '피에는 피, 너희가 죽이면 우리도 죽인다'는 식의 게릴라전이 벌어진다. 11월 중순에는 한라산 둘레 중산간 지역의 160여 개 마을 중 130여 개 마을을 소각하고 주민들을 대량 학살하는 '대방화 초토화 작전'이 벌어지면서, 방화와 살인에 도취된 토벌대가 환각 속에서 계속 불을 지르고 고함을 치며 총을 난사한다. "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태우고, 모조리 빼앗아라!"는 이른바 '삼광 작전'으로 '아비규환의 지옥도'가 펼쳐진다. 살육과 방화의 아수라장은 4~5일간 집중된 초토화 작전으로 이어지고, 1만 5천 채의 집이 소각되고 2만 명의 피란민이 생기며, 산군과 피란민들의 혈거 생활이 시작된다. 이후 12월 중순부터 약 20일간 집중적으로 집단학살이 벌어지면서 즉결처분권이 졸병에게까지 주어지고 거의 모든 섬의 젊은이들이 검거와 사살의 대상이 된다. 처음에는 만 15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성이 검거와 사살 대상이었으나 나중에는 노인과 여자, 아이들까지 무차별로 확대된다.

4) 산 자의 몫

<에필로그>에서는 하산했던 할아버지가 가까스로 살아남아 자신이 '살아 있지 않고 죽은 자'이기 때문에 "살아 있는 죽은 자"라고 말한다. 창근은 영미에게 '방 안의 코끼리' 비유처럼 너무 크고 어두워서 그 실체를 잘 알 수 없는 것이 '4·3 사건'이라면서 "우리를 깔아뭉개버릴 것 같은 압도적인 무게와 거대한 부피"에 대한 무서움을 전한다. 하지만 영미는 "그 참혹함의 무게에 압도당해서 너무 진지하고 너무 슬픈 다큐가 돼버리면 안 돼"라고 말하면서, 3만의 슬픈 원혼들을 눈물로 애도하고 즐거운 웃음으로 기쁘게 해드리자고 제안한다. 화자 역시 "눈물과 웃음이 함께 있는 영화"로 "맺힌 설움"을 풀어내자고 전하는 것으로 작품은 마무리된다.

작가는 <작가의 말>에서 1945~48년까지를 흔히 해방공간이라고 하지만, "불행히도 한국사에 유례없는 무서운 폭력의 시기이기도 했"다면서, 『제주도우다』가 "국가폭력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거의 절반이 목숨을 잃어야 했던 제주도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당시 청년들을 사로잡았던 열정의 정체는 무엇이고, 어떻게 그들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갔는지, 삶과 죽음은 무엇이고 인간은 또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작품이라고 덧붙인다.

3. 잠들 수 없는 제주

필자가 대학 시절이던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대학가에서 자주 불리었던 슬픈 곡조의 노래가 안치환 작사 작곡의 <잠들지 않는 남도>다. 1절이 "외로운 대지의 깃발 / 흩날리는 이 녘의 땅 / 어둠살 뚫고 피어난 / 피에 젖은 유채꽃이여 // 검붉은 저녁 햇살에 / 꽃잎 시들었어도 / 살 흐르는 세월에 / 그 향기 더욱 진하리 // 아.. 아- / 아.. 아- 아- / 아- 반역의 세월이여 / 아- 통곡의 세월이여 / 아- 잠들지 않는 남도 / 한라산이여"이다. 더불어 4월이 되면 1960년 4·19 혁명을 애도하는 노래로 이영도 시조 시인의 「진달래-다시 4·19 날에」를 함께 불렀다. 필자에게 4월은 4·3과 4·19로 상기되며 대한민국의 4월이 왜 '잔인한 달'일 수밖에 없는지를 체감하는 날들이었다. 그리고 '자유와 민주와 통일'에 대한 기대 속에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는 날들이었다.

2014년 발생한 '4·16 세월호 참사' 이래로 여전히 혹은 더 큰 심연처럼 4월은 대한민국에서 현대사의 비극을 내장한 계절이 되고 있다. 1948년 이후 2024년 현재까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참담하게 묻고 또 물을 수밖에 없는 시절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인간의 인간다움'을 위해 계속되는 질문을 던져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의 항상적 질문이 비극과 참사를 예방하는 '기억의 집단지성'을 일깨울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억은 힘이 세어야 한다.

오태호는 2001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문학평론에 당선되었다. 평론집으로 『오래된 서사』 『여백이 미학』 『환상통을 앓다』 『허공의 지도』 『공명하는 마음들』 등이 있으며, 연구서로 『문학으로 읽는 북한』 『한반도 평화문학을 상상하다-21세기 분단문학의 현장』 등이 있다. 현재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DMZ평화의 길(인천, 경기코스)을 가다

글·사진 이영동 DMZ평화네트워크 상임이사

6년 전,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 군사합의서에서 남북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실현하자는 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이하여 'DMZ 평화의 길'이 고성, 철원, 파주 3개 지역에 순차적으로 조성되어 민간에 개방되었다. 이 지역은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DMZ 내 11개의 GP가 철거되고, 화살머리고지에서는 지뢰 제거와 유해 발굴, 전술도로가 연결된 지역이다. 당시 유엔사(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평화의 길을 승인하면서 이 길은 남북 간 교류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방에 앞서 에이브럼스 유엔군 사령관은 고성 평화의 길을 직접 둘러보기도 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DMZ의 관할권은 우리 군에 있지 않고 유엔사령부에 있다는 사실이다. DMZ평화의 길은 최종적으로 유엔사의 승인을 받고서야 민간에 개방되었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DMZ관할권은 지금까지 유엔사가 가지고 있다. 현재의 남북관계는 강 대 강 구도를 몇 년째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 북한은 1번 국도와 7번 국도는 물론 화살머리 전술도로까지 지뢰를 매설하여 폐쇄했다고 발표했다. 남북이 연결한 도로는 이제 모두 막혀버렸다. '적대국', '두 개의 국가'라는 표현을 보면서 진정한 평화의 길은 멀어져가는 느낌이 들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DMZ평화의 길은 점차 늘어 지금은 인천, 경기, 강원 DMZ 일대에 10개의 코스가 운영되고 있다. 탐방은 한국관광공사 누리집 (www.durunubi.kr)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모든 코스는 회차별 20명으로 한정되어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비용은 1만 원이다. 초창기와 달리 코스도 많이 단축되고 탐방 횟수도 줄어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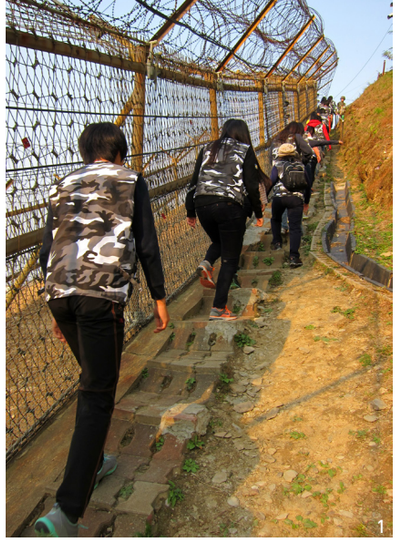
1 — 도라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의 모습. 남한의 대성동 마을 태극기와 북한의 기정동 마을 인공기가 함께 펄럭이고 있다.
2 — 교동도 망향대에서 볼 수 있는 북한 연백평야.(사진: 김성헌)

첫 번째 코스,
강화평화전망대 코스

강화전쟁박물관에서 목~일 오전 10시에 출발하여 6.25참전용사기념공원- 강화평화전망대- 의두분초- 불장돈대- 대룡시장- 화개공원으로 이어지는 총길이 62.5km이며 대부분 버스로 이동하고 의두분초- 불장돈대까지 1.5km만 도보로 이동한다. 도보 구간의 오른쪽 한강 하구(염하)는 중립수역이며, 정전협정에 따르면 자유롭게 남북의 배가 항행할 수 있으나 현실은 배 한 척도 운항하지 않고 있다. 강화평화전망대에서는 강 건너 북한의 개풍군의 마을과 최근에 만들어진 살림집과 개성의 송악산을 볼 수 있다. 강화 교동에 있는 대룡시장은 북한의 연백군에서 2.5km 염하를 건너온 실향민들이 고향을 그리며 연백시장을 본떠서 만든 시장으로 70년째 이어오고 있다. '1박 2일'에 두 번 소개되면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주말에는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대부분의 1세대는 거의 없고 2~3세대가 운영하고 있다. 언론에 가장 많이 나온 교동이발관은 간판은 그대로이지만 딸들이 식당으로 이용하고 있다. 교동 화개산 정상에 있는 화개정원은 최근에 개방되었으며, 도보와 모노레일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다. 정상에서는 북한의 연백평야와 벽란도가 있는 예성강과 강화의 끝 섬 말도도 볼 수 있다.

두 번째 코스,
한강하구-애기봉 코스

김포아트홀에서 수~일 오후 12시 30분에 출발하여 시암리철책길(도보 4.4km) - 애기봉평화생태공원전망대로 이어지는 총길이 62.8km 코스이다. 한강 하구 시암리 습지를 도보로 걸을 수 있다. 새롭게 단장된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전망대에서는



1 — 평화의 길 철책선을 따라 걷고 있는 청소년
2 — 연천 임진강에서 평화의 길을 걷고 있는 내외국인
3 — 파주 평화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북한 농촌 암실마을에서 농사짓는 북한 주민들과 일상생활을 볼 수 있다. 앞에 흐르는 강은 한강하구로 조강이라고 부른다. 조강은 오른편에서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 서해 말도까지 흐르는 강으로 한강 하구의 다른 이름으로 70km에 이른다. 인근 조강나루는 하루에 수백 척의 상선과 세곡선이 지나갔으며 한국전쟁 전까지 100여 호의 가구가 밀집한 큰 마을이 있었고 항행에 지친 사공들이 잠시 쉬어가던 나루터였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이 처음 넘어온 조강나루터는 마을은 사라지고 철조망으로 둘러싸이고 출입이 제한되어 70년 동안 인적이 끊긴 곳으로 남아 있다.

세 번째 코스,
장항습지생태 코스

고양관광정보센터에서 수~토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하여 행주나루터- 행주산성역사공원- 장항습지 탐조대(도보 2.5km)- 라들나온(통일촌군막사)로 이어지는 총길이 29.5km 코스이다. 장항습지는 2006년 환경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21년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었다.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하구에 둑이 없어 조수의 출입이 자유롭고, 강물과 바닷물이 교류하는 기수역 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다. 장항습지는 우리나라 최대의 버드나무 군락지이자 겨울 철새인 재두루미와 큰 기러기, 청둥오리 등 40여 종 2만여 마리가 월동한다. 하지만 홍수 때 수많은 쓰레기가 밀려온 곳이기도 하다. 환경단체에서는 습지보호를 위해 쓰레기를 치우고 있으며, 몇 년 전에는 장마 때 떠내려온 것으로 추측되는 지뢰를 밟아 환경단체 회원이 크게 다치기도 하였다.

네 번째 코스,
파주 임진각-도라산 코스

임진각에서 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2회 출발하며 평일 오후 기준으로 코스는 생태탐방로(도보 1.4km)-도라산전망대- 남북출입사무소- 도라산역으로 총길이 21.4km 코스이다. 파주 코스는 예전에는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철거된 GP(DMZ 내에 위치)까지 포함되어 신 1번 국도와 경의선, 장단역터와 개성공단을 보다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으나 지금은 GP구간은 폐쇄되어 긴장감이 떨어지고 있다. 도라산전망대에 올라가면 드넓은 장단평야와 개성공단, 개성 시내, 송악산이 한눈에 들어온다. 북한은 2020년 6월 개성공단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 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위반'이라는 이유로 폭파해 버렸다. 2016년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전까지는 123개 남한기업에 5만여 명의 북측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었다. 전망대 오른쪽을 바라보면 1.6km의 거리를 두고 남한의 대성동 마을 태극기와 북한의 기정동 마을 인공기가 경쟁적으로 펄럭이고 있으며, 두 마을은 정전협정에 따라 DMZ 내에 자리잡고 있다. 대성동마을 옆 희미하게 보이는 건물이 판문점이다. 판문점은 과거 정전협정을 했던 곳으로 이후 남북 간의 주요 회담을 하는 장소로 사용된다. 2019년 남·북·미 정상이 한자리에 모였던 곳이다. 판문점 견학은 통일부 판문점견학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가능하지만, 올해는 아직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파주시에서 운영하는'DMZ평화관광'은 임진각에서 출발하여 전망대-제3땅굴로 가는 코스다. 개인은 임진각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되고 30명 이상은 단체가 준비한 버스를 이용하여 전망대와 땅굴을 하루에 25회씩 이용할 수 있다. 선착순으로 이용하는 관계로 'DMZ평화관광'을 가기 위해 아침 일찍 매표소 주변에서 대기하면서 햄버거 등으로 요기를 때우는 외국인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임진각 망배단은 매년 추석 때 실향민들이 모여 경모제를 지내고 있고, 정전협정 이후 1만여 명의 포로들이 귀환한 자유의 다리가 복원되어 있다.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전쟁물자를 싣고 개성에서 평양으로 가던 증기기관차가 1.4후퇴 때 장단역에서 파괴되었는데, 그 녹슨 증기가관차가 여기저기 총알자국을 간직한 채 전시되어 있다. 임진강 철교를 당시에는 독개다리라고 불렀으며 피탄자국을 여기저기 간직한 채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다. 임진강 너머는 민통선 지역으로 군부대의 허락을 받아야 건너가지만 신분확인 후 곤돌라를 타면 임진강을 건너갈 수 있다. 평화곤돌라를 타고 임진강 건너편에 도착하면 2007년까지 미군이 주둔했던 미군기지 캠프 그리브스가 나온다. 미군의 볼링장으로 사용했던 체육관을 개조하여 한국전쟁과 관련된 전시물을 볼 수 있다. 이라크 전쟁 당시 철수된 미군은 3천 명 정도이다.

다섯 번째 코스,
연천 1.21 침투로 탐방 코스

연천역에서 금~일 오전 10시, 오후 2시 두 번 출발하는 코스는 1.21 침투로-비룡전망대(1.8km 도보) -호로고루성으로 이어지는 총길이 12.3km 코스이다. 장단군 일부를 편입한 연천군은 경기도 최북단 지역으로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이다. 1.21 침투로란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등 북한군 31명의 청와대 습격 사건 당시 침투했던 루트이며, 당시 미군이 관할하는 DMZ 연천지역을 말한다. 1·21사태 이후 한국 사회는 많은 변화를 불러왔다. 예비군과 특수임무부대가 창설되었고,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교련이 정식과목으로 채택되었다. 비룡전망대에 올라가면 DMZ 안에 좌우로 철거된 GP 흔적이 나오며, 과거에는 철책선을 직접 걸을 기회도 있었으나 지금은 개방되지 않고 있다. 비룡전망대는 연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별도로 출입 신청이 가능하다. 연천에는 고구려의 호로고루성, 당포성, 은대리성 3개의 성이 있는데 그중 비룡전망대 인근에 있는 호로고루성의 규모가 가장 크다. 주변 관광지로는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릉과 일제 강점기 시절 화신백화점 분점이 있을 정도로 번창했었던 고랑포나루터와 역사박물관이 있다.

이영동은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통일교육을 주제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통일교육협의회 사무총장, 민화협 상임집행위원장을 역임했으며 DMZ평화네트워크 상임이사 등을 맡고 있다. 오랫동안 DMZ접경지역을 답사하며 평화 해설사로 활동해온 평화통일 운동가이다.

<민족화해>는 민화협의 생생한 소식과 알찬 정보가 가득합니다!

〈독자엽서〉로 정답과 의견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26호의 정답은 '②민족화합'입니다. 채택되신 분들께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주소를 명확히 보내주세요. 선정의 확률이 높아진답니다!

원희복 편집인님 칼럼을 읽다보니 더욱 더 남북 평화와 통일이 간절해집니다. 한 평생 혈육을 기다리신 이산가족 1세대는 가족을 만나지 못한 한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 통일이란 뜻을 재정립, 즉 '재통일'이라고 명명하여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희망과 당위를 함축했으면 좋겠습니다. 민화협과 〈민족화해〉도 다시 시작한다는 '재창간'의 각오로 심기일전해야하는 말씀에 공감하며 격하게 응원합니다! – **오은경** 부산 연제구

김덕룡 이사장님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출발하면 된다"라는 새해 덕담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남북문제, 서민경제 등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봅니다. '통일'이라는 기본을 지키되 지금 처한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문제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 어른으로써 김덕룡 이사장님도 건강한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민족화해〉 독자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문선정** 서울 노원구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우리 한민족은 고난과 위기를 화합과 성공으로 만드는 DNA를 지녔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한반도를 둘러싼 내외부적 환경이 여느 해보다 좋지 않은 2024년이지만, '푸른 용의 해'처럼 푸르고 힘찬 한반도 통일의 염원을 담아 한민족 모두가 지혜를 모은다면 올해를 민족화해 평화통일의 진정한 원년을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 **조영민** 경기 의정부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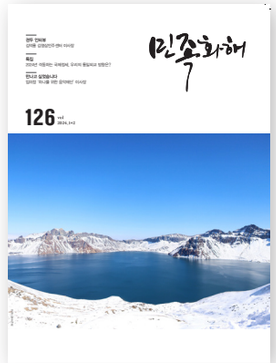
최근 우리 외교가 한 · 미 · 일 위주로 되어가자 극도로 불안과 위협을 느끼는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사일 시험 등을 통해 핵무력을 유지하고, 중국과 러시아와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반도 긴장상황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 내 긍정적 변화와 군사강화정책 변화를 위해 북한 주민에게 우리의 전정성을 알리고 인도주의를 내세우는 조한범 박사의 '한반도 선언'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 **구중진** 부산 진구

한 해의 우표를 모아 발간하는 연간우표책에 대한 기사를 유익하게 읽었습니다. 우표 수집에 관심이 많아 평소 북한 우표는 어떨까 많이 궁금해 했었습니다. 북측은 〈2022 조선 우표 년감〉에서 우리와 달리 우표 판매량을 명시하고 한글, 영어, 한자로도 설명문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곧 발행될 〈2023년 연간 우표책〉이 어떨까 궁금해집니다.

– **최용범** 경기 고양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PC와 스마트폰에서

<민족화해>를 만나보세요.



〈민족화해〉는 민화협의 생생한 소식과 남북 이슈, 퀴즈
그리고 독자 참여까지 알찬 정보가 가득합니다.
독자엽서를 보내주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올해부터 〈민족화해〉는 계간으로 발행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QR코드만 스캔하면 민화협 소식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화협 블로그 민화협 페이스북 민화협 홈페이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민화협 출신 당선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화협 임원, 정책위원,
회원단체장 출신 18명이 당선되었습니다.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민의를 담아 한반도 통일을 위한 의정 활동을 기대합니다.

권영진
제7기 집행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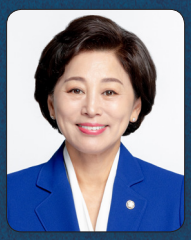
김소희
제12기 정책위원

김주영
제11기 상임의장

김준형
제10기 정책위원

김태년
제9·10기 공동의장

나경원
제9·10기 상임의장



남인순
제6기 상임의장

박홍근
제 9·11·12기 정책위원장

이광희
전 KYC 공동대표

이용선
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이학영
제4·5·6기 공동의장

장경태
제12기 청년위원장

정동영
㈔대륙으로가는길 이사장

정성국
제13기 상임의장

진성준
제8기 집행위원장

천준호
전 KYC 공동대표

최민희
전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한정애
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가나다순